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6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자료집

2016.07.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6월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의제 생성 및 확산을 위해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학술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오후 2:00~6:00

◆ 장소: 창작과비평사 50주년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창비서교빌딩 지하 2층)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프로그램		
2:00~2:10 (10분)	환영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10~2:15 (05분)	개회사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소장
2:15~2:25 (10분)	사회자 및 토론자 소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소장
주제1. 한국 민주주의 진단 (100분토론, 사회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손혁재 교수)		
2:30~3:00 (30분)	토론1. 지정토론	토론자당 5분씩, 총 7명
3:00~4:10 (70분)	종합토론	전원참여
4:10~4:20 (10분)	휴식	
주제2. 한국 민주주의 미래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쉽 (100분토론, 사회자 - 한겨레 전략기획실 박창식 실장)		
4:20~4:50 (30분)	토론2. 지정토론	토론자당 5분씩, 총 7명
4:50~6:00 (70분)	종합토론	전원참여
6:20~7:20 (60분)	리셉션(참가자 네트워킹 파티)	비공개

문의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2-3709-7617, lani1025@kdemo.or.kr)

<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참가자 - 가나다순>

	이 름	직 위
사회자	손 혁 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자	박 창 식	한겨레 전략기획실 실장
토론자	곽 송 연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권 수 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토론자	김 재 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김 지 원	한국복지대 장애인행정과 조교수
토론자	김 현 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모 춘 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박 현 우	통일의별 대표
토론자	유 경 남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토론자	이 관 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이 효 빈	광주여성재단 연구원
토론자	임 미 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토론자	최 동 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정치법제 연구원
토론자	최 종 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토 론 자 (가나다순)
1부 토론자 한국 민주주의 진단	1. 곽송연: 한국 민주주의의 지표 2. 권수현: 한국 여성의 현주소 3. 김지원: 복지와 경제민주화 4. 김현진: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5. 이관후: 대표성의 위기 6. 이효빈: 박근혜정부 공약이행률
2부 토론자 한국 민주주의 미래	1. 김재철: 슈퍼리더가 필요한 대한민국 2. 모춘흥: 통일시대를 짊어질 청년세대 3. 박현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 4. 유경남: 봉기의 가능성 5. 임미리: 적대에서 공감으로, 전선에서 연대로 6. 최동철: 협치를 통해 창조하는 정치, 섬기는 정치 7. 최종속: 정치적 리더십 덕목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전문성

2016년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인사말

2016. 06. 29. (수) 14:00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상증 이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술토론회에 선뜻 사회자와 토론자로 나서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2004년 이래 해마다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1번째로 개최되는 6.10 기념 학술토론회는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한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중심적인 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올해 학술토론회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한국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본주의를 토양으로 자라난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다양한 관점과 주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체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실천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 질 신진 연구자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전략과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새롭게 불어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행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도전과 혁신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 상 증 이사장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1. 한국 민주주의 진단: 토론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진단

곽승연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1. 민주주의 진단의 준거 틀 (뤼시마이어 외 1997)

1)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 ①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한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표선출.
- ② (행정부 수반의 직접 선출에 의해 보완되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회에 대한 국가기구의 책임성.
- ③ 자의적인 국가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호 및 표현, 결사의 자유

2)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가 침해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립, 공고화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내 하층계급의 성장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주요한 기반

2.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 진단

<표 1>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자유화와 평등화 지수 변화

연도	정치		시민사회	
	자유화	평등화	자유화	평등화
2011	6.60	5.11	5.54	4.14
2012	6.33	4.82	5.41	4.4
2013	6.48	5.34	4.75	3.84
2014	5.54	4.74	5.02	4.04

출처: 김형철(2015, 63)

<표 1>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지수로 평가의 척도는 10점 기준이다(김형철 2015, 57-63). 이에 따르면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준은 측정이 시작된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정치적 자유의 수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측정값의 절반이나 그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진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이후에는 정치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양상은 앞서 제시한 민주주의 진단 준거(뤼시마이어 외 1997)를 기준으로 할 2016년 현재에는 더욱더 가속화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한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표선출은 박근혜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국정원 등 여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둘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회에 대한 국가기구의 책임성 역시 뒷걸음질 치는 형국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사퇴과정의 비민주성, 공천파동,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이 행정부 군림의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자의적인 국가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호 및 표현, 결사의 자유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후퇴를 가져왔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내내 자유(free)국가의 지위에 있었던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분자유(partly free) 수준으로 격하됐으며, 현재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는 한국이 역대 최하위인 70위로 보고됐다(경향신문 2016/5/29). 더불어 최근 불거진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와 전경련의 유착 의혹은 냉전보수주의 세력의 담론 독점과 사유화를 향한 극한적 욕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본래 '한국의 재벌과 보수 언론은 민주주의 진전 이전부터 여론의 주도자이자, 사회적 담론 권력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다(최장집 2001). 이 같은 공론장 내의 불평등한 구조는 이미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으로 한차례 더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자본이 반공 냉전주의 문법의 복원을 통해 제한하려 한 이 사안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3.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수준 진단

<표 2> 한국의 경제영역에서 자유화와 평등화 지수 변화

연도	경제	
	자유화	평등화
2011	4.46	3.74
2012	4.57	3.16
2013	3.67	2.95
2014	4.64	3.05

출처: 김형철(2015, 63)

<표 2>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영역에서 자유화와 평등화 지수는 평가 척도 10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평등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이던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앞서 밝힌 민주주의 진단의 준거(뤼시마이어 외 1997)대로 시민사회 내 하층계급의 성장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립, 공고화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조건이다. 즉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약한 기반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라 진단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진단 - 한국 여성의 현주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51명 당선: 지역구 26, 비례 25)

→ 191개 국가 중 113위(2016년 4월 1일 기준, IPU)

지역	단독 또는 하원	상원	종합
전체	22.8	22.0	22.7
북유럽	41.1	-	-
북미	27.4	26.7	27.3
유럽(북유럽제외)	24.3	24.7	24.4
아프리카(사하라사막이남)	23.3	21.9	23.1
아시아	19.2	15.3	18.8
아랍	18.4	12.1	17.6
태평양 국가들	13.5	36.0	16.0

* 출처: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IPU (<http://www.ipu.org/wmn-e/classif.htm>)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이 발표한 ‘세계 젠더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격차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115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점수(score)는 상승하지만 순위(rank)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젠더평등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줌

SAMPLE		INDEX		ECONOMY		EDUCATION		HEALTH		POLITICS	
Year	No. of countries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2015	145	115	0.651	125	0.557	102	0.965	79	0.973	101	0.107
2014	142	117	0.640	124	0.512	103	0.965	74	0.973	93	0.112
2013	136	111	0.635	118	0.504	100	0.959	75	0.973	86	0.105
2012	135	108	0.636	116	0.509	99	0.959	78	0.973	86	0.101
2011	135	107	0.628	117	0.493	97	0.948	78	0.974	90	0.097
2010	134	104	0.634	111	0.520	100	0.947	79	0.973	86	0.097
2009	134	115	0.615	113	0.520	109	0.894	80	0.973	104	0.071
2008	130	108	0.615	110	0.487	99	0.937	107	0.967	102	0.071
2007	128	97	0.641	90	0.580	94	0.949	106	0.967	95	0.067
2006	115	92	0.616	96	0.481	82	0.948	94	0.967	84	0.067
2006-2015 CHANGE		▲ 0.035		▲ 0.077		▲ 0.017		▲ 0.006		▲ 0.040	

* 출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Part2: Country Profiles(Korea, Rep.).’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5/economies/#economy=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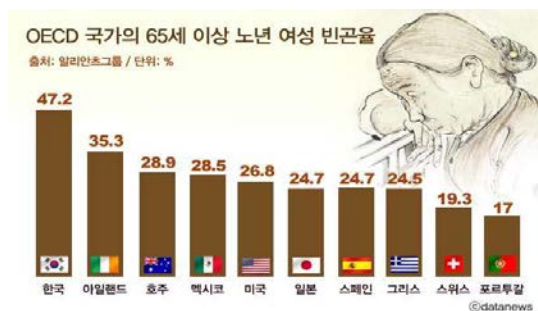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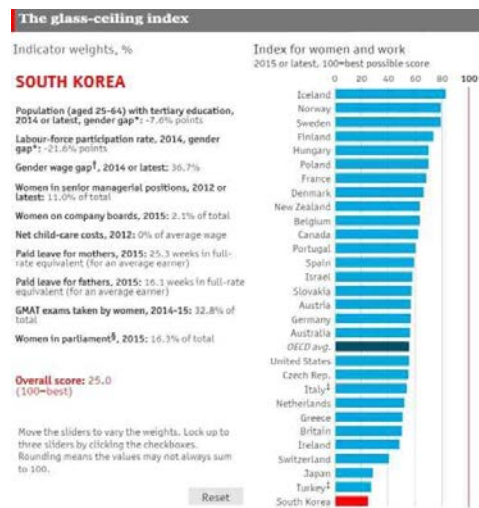
→2016년 5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 100점 만점에 25.0점으로 29개 국가 중 꼴지.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Gender wage gap) OECD 평균은 15.6%인

반면, 한국은 36.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알리안츠 그룹이 노년 여성의 빈곤리스크를 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30개국 중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여성노인

빈곤율이 4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데이터뉴스 2014.03.10.)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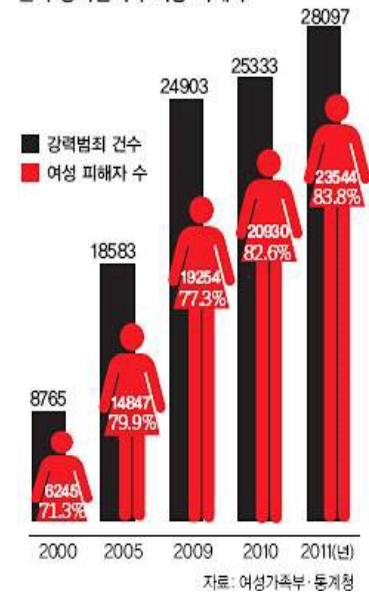
¹ 출처: "한국, 성별 임금격차 OECD 중 일 커...유리천장 지수 4년째 '꼴찌.'" 아시아투데이> 2016.03.0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04002125237>)

² 출처: "한국 노인 여성 빈곤율 47.2%, OECD 중 최고." <데이터뉴스> 2014.03.10.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5921>)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최소 1.7일 간격으로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음(여성신문 2016.03.02.)³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 1995년 29.9%에서 2000년 71.3%, 2005년 79.9%, 2011년 83.8%로 증가(주간조선2013.07.22).⁴ 2013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90.2%(서울경제 2015.09.30.)로 절대 다수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 의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됨.⁵ 유엔(UN)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

한국 강력범죄와 여성 피해자



무소(UNODC)에 따르면, 2008년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50.1%. 미국 22.5%, 중국30.1%, 영국 33.9%, 프랑스 34.3% 등 뿐만 아니라 여 성인권이 낮다고 이야기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의 30%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 기록(주간조선 2013.07.22)

→민주화 이후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한국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는 남성화되고 젠더화된 한국정치가 초래한 결과임

³) "[20대 국회 여성 과제 - 여성인권]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여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해야."

<여성신문> 2016.03.02. (<http://www.womennews.co.kr/news/91703#.V0MayjWLSWg>)

⁴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한국 왜 많나." <주간조선>2266호 2013.07.2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266100001>)

⁵ "'그냥 찌르고 싶었다...그냥'-문지마 범죄 보고서." <서울경제> 2015.09.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930160407028>)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분노하는 국민과 민주주의

김재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국내 도입은 아마도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광복이 되면서부터인 듯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명목적으로만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를 따랐지 실질적으로 독재정권이 지속됨에 따라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50여 년 동안 이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었던 듯하다. 즉 90년대 중후 반이 되어서야 이 땅에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이 광복 이후 이 땅에 어렵게 싹을 피운 민주주의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삶과 관련 있지 않을까? 국민들 중에는 나와 같이 IMF 금융위기 이전이 살기 좋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나의 어린 시절(90년대 중반)을 돌아해보면, 그 당시에 물가는 지금에 비해서 정말 낮았던 것 같다. 슈퍼마켓(당시에 마트는 없었음)에서 아이스크림을 불과 1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L당 6~700원대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물가 측면에서 큰 걱정 없이 90년대 중반을 보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IMF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정말 이 위기는 해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IMF에 기재부 장관이 급전을 빌리러 가는 뉴스만 매번 방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6~7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치솟고, 다른 물가들도 덩달아서 2~3배 올랐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등 최선을 다했다.

이처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겪으면서 본인들이 만족할만한 경제적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한 듯하다. 그 결과,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한 MB정부가 탄생했고,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자의 두 정부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해 선택한 대안들이었는데,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며 양극화는 더 극에 달하게 되었다. 즉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기득권들의 지갑은 두꺼워졌다.

그 결과, 국민들은 좌절했고 정치나 이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본인들 생계에만 치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들이 “어차피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 없어”라는 마음으로 기권을 해버리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진 사이, 자본을 많이 가진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달콤한 꿀을 바른 말로 그 정책을 수용하게 현혹했다. 대표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양성하며,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임금을 줄인다는 노동개혁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와 같이 친기업 또는 친기득권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선거 때와는 다른 정책을 일삼자 좌절했던 국민들이 IMF

금융위기 때 보여주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섰다. 특히 대다수 대학졸업자로 고학력자들인 청년들 그리고 본인들이 매번 지지했던 보수정당에 실망을 느낀 중·장년층들이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였다.

그 결과 비록 야당이 2개 존립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소야대의 모습을 갖추어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다. 과거 4·19혁명과 수 없이 많았던 민주화 항쟁에서도 그랬듯 국민들이 직접 집단행동으로 나서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켜야만 이 나라의 부조리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성을 토대로 양극화를 방지하고, 기득권들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20대 총선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추후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없다고 난 생각한다. 다만 매 선거에서 항상 국민들에 의한 심판이 일어나야 하고 항상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 경제

김지원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조교수)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29년이 흘렀다. 6월항쟁은 오랜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온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저항이었고 정치적으로 과거 군사독재의 종언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발독재 정치권력에 의한 국가주도적 상명하달식(Top-down)식 경제발전전략과 재벌편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경제적 불평 등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래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897년 Sidney and Webb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역사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지만 핵심내용은 특정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방지, 소유분산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따라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일 것이다. 그 간 한국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부족과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 정부(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 3개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등)를 입법화하여 역대 정부와 비교 시 가장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여전히 한국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 하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7%로 낮춰 잡았으며 주요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2%대 중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조선, 철강, 해운업의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쉬운 해고’와 ‘낮은 실업급여’로 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최근에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충분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논란과 비판에 다시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에는 군부독재시절에 억압받더라도 국가가 계획하고 앞장서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소수재벌에 의한 부의 편중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군으로 결국 그들의 국부를 증

대시커 대다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우리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이루는 정치인과 관료가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순수한 시장의 효율성 원리도 아닌 민주적 이념도 아닌 왜곡된 정치사상이 개입된 시장경제정책으로 한국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다시 한 번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되새기며 잠자고 있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시장이나 정부가 주도권을 지기보다는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위민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판결의 정치학적 쟁점

김현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산을 결정했고, 소속 의원인 김미희·이석기·김재연·오병윤·이상규 등 5명의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도 상실했다. 정치적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사법부는 정치과정 개입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이는 정치적 공론장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이자 순기능을 근본적으로 억압해 버리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통해 사법부는 헌법의 틀 속에서 합법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적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가 5.16 쿠데타 이후 폐지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은 대법원 또는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다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범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권을 갖는 헌법재판소는 6월 민주항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1987년 헌법의 산물이다. 제9차 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이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바로 그 민주적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정당정치의 다양성을 종식시키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법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한 정치영역간의 갈등과 조정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점차 이러한 영역 파괴는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토크빌은 일찍이 미국정치를 관찰하고, 정치적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치 행위자들 대신 법원이 정책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Graber 1993; Stone Sweet 1999, 2004; Ginsburg 2003; Hirschl 2004; Whittington 2007). 허셜(Ran Hirschl)이 주장하는 사법통치주의(Juristocracy)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최장집은 사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빗대어 ‘제왕적 사법부’라고 칭하기도 했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치학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권과 심판권을 각각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그 판단의 신중함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는 제소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도 명시적 절차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헌법 기관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형태에 따라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견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소권과 심판권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국무회의의 심의 역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사법의 정치화’가 가장 극단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 슈미트(Carl Schmitt)는 의회제 통치 구조가 여러 정당들의 수중에 놓여 있는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금번 정당해산심판은 사법부가 합법성의 탈을 쓰고 정당성의 논리를 강요하는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분노와 혐오로 자욱한 2016년

모춘홍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2016년 현재 한국의 젊은 청년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명명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헬조선’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레토릭으로 ‘대한민국’은 나를 포함한 청장년층에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다소 낯설고 두려운 명명이 단순화된 감각적 유행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게 내면화되어 있다. 이 단어는 오늘날 한 순간 지나가는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결함과 오류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대면, 저항의 목소리가 바로 ‘헬조선’이다.

얼마 전 강의시간의 짬을 내어 학생들에게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한 여학생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있을지언정 나를 포함한 여성들을 보호해줄 사회는 없는 것”같다는 답변을 했다. 얼마 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나에게도 충격적이었는데 여성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자꾸만 그 여학생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중에 ‘공간/장소’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다. 사실 ‘공간/장소’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볼 기회는 우리 사회에서의 탈북자들의 위치와 관련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이었다. 내가 읽었던 글의 핵심은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라는 ‘공간’은 존재할지언정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해서 살아갈 ‘장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논하면서 공간/장소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는 나의 강의를 듣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여성들의 울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물론 이 또한 나라는 대한민국의 한 남자의 시선으로서 내린 답변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건이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 준 동시에 자신들의 권리와 안위가 제대로 지켜지는 ‘장소’, 즉 사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까지 “세월호 이후의 국가”, “세월호 이후에 도래해야 할 국가”라는 대중적인 구호에 더해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의 사회”,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에 도래해야 할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헬조선’은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분노와 혐오의 다양한 풍경이 내장되어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국가기능의 부재, 무능한 정부에 대한 염증이 담겨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 아니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이익 보존에만 급급한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진단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통일의 별 대표)

우리는 해방 정국의 혼란과 역경을 딛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냈습니다. 6.25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산업화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민주화’를 쟁취해 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반도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2016년 오늘, 29주년을 맞이한 6월 민주항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추동한 4.19혁명, 1980년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면서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민주화운동,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동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월 민주항쟁. 오늘날 우리가 분단이라는 ‘미완의 광복’을 ‘새로운 통일의 역사’로 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결단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지켜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기회의 평등 속에서 누구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모스 크라토스(Demos Cratos)라는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語源)에서 알 수 있듯, 데모스(Demos)는 시민을 크라토스(Cratos)는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정부의 통제 권한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이 원한다면, 절차를 통해 정권을 바꾸거나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부를 축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정치제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선거 때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고, 또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쟁과 헌신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이자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점점 무력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6월 민주항쟁 이후로 확대·발전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 정부 기관을 선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편에서 기업과 소수 특권층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경

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무대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선거라는 화려한 무대 조명 속에 기업과 소수 특권층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른바 금권정치(plutocracy, 金權政治) 앞에 우리의 눈과 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저 무기력하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기업의 고도화된 정치자금 앞에 아무 것도,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까닭이 아닐까요? 그저 나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조금만 더 버텨내면 내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보이는 연금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미래를 희생시키며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절망과 눈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한 계층이 지배하는 정치의 시대. 일찍이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듯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기업과 소수 특권층을 분리시켜내야 합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新自由主義)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구시대적 악성 바이러스를 전관예우, 각종 입법 로비와 특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등의 형태로 변종 발전시키면서 사실상 기업의 논리가 국가 정책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날 수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역행하는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가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을 위협하는 가진 자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민주주의만의 도전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며 사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의 ‘불평등(inequality)’을 정부, 국가, 그리고 사법체계가 체계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20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정세균 국회의장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회와 가능성의 나라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평화의 위기, 양극화 위기, 경쟁력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냉철하게 경고하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민주주의시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소환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인민의 힘이나 강제력을 가리킬 뿐 정체의 구성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다는 민주주의의 모호함을 전제한다면, 우리 사회가 말해왔던 ‘민주주의’ 언설(言說)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오늘의 역사서술과 역사 논의들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서술되고 이야기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들을 살펴 분석해야겠지만, ‘과거의 민주화운동-현재의 민주주의’라는 ‘과거와 현재’라는 이중적 시간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과거의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는지,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지 바라보고 있다. 중요한 날(?)이 되면 현충원-4.19묘지-5.18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 매년 5월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민주화운동의 ‘과거’가 오늘의 민주주의 담론지형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이 항상 ‘과거’의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나, 민주주의가 현재나 미래적 가치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은 한국현대사 속에서 민주화-민주주의시대에 무엇을 기억하는-무엇을 망각하는-‘정치(적 소통)’, ‘문화적 의례’, ‘역사 담론’이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느냐에 따라 오늘의 민주주의의 기억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는 기억하기가 과거의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특정한 무엇”을 현재로 불러들이고, 이것을 ‘현재’라는 이미지에 계속 연결시키는 것은, 특정한 민주주의의 기억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닐까?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은 과거에 유폐되고, 현재적이고 제한된 용법으로 오늘에 ‘소환’되는 재현의 정치전략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5·18왜곡담론 현상을 보면, 일반인들은 5·18왜곡담론이 광주, 5·18에 대해서만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왜곡담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왜곡은 하나의 사례이고, 왜곡세력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부인과 왜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세력 vs 독재정권’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독재는 투쟁의 대상이었기에, 독재의 패배를 민주화의 “승리”로만 인식했지, 과연 ‘독재-패배’는 어떻게 평가되고 서술, 전승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독재의 패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독재정권 시기에 대한 ‘향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했지만, 오늘과 같이 왜곡과 부인의 발언들과 함께 일련의 ‘정치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곡과 부인의 내용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들과 이들 집단이 외형적인 규모를 갖추고, ‘하나의 테두리’로 집결하며 다른 논의들과 주체들을 하나의 ‘담론’으로 포섭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정당한 의제들의 정당한 경쟁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나아가 분단의 구조 속에서 언제든지 정치적 현실의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주요한 논리는 ‘반공주의’이었다. 이 반공주의 회로는 현존하고 있다.

그에 반해 소위 ‘민주주의’ 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승리의 “신화”로만 논의한다. 그들의 발화는 ‘담론적인 허구성’만 띄고 부유하고 있고, 정치주체들의 다양한 실천들은 방향성을 잃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실천의 경험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민주주의 세력’들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소환은 현실적 생명은 제거한 듯하다. 그렇다고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하나의 아젠다 아래 집결하고, 결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경쟁하는 것이 주체들의 힘을 신장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 있겠다.

그런데 다수 인민의 의견을 자처하며, 부인과 왜곡의 주체들에 대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한쪽은 왜곡과 부인의 논리로 자신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에 반해 한쪽은 생명력을 제거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 ‘민주화운동’의 현실적 수준은 아닌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지향들이 현실정치에서 실현 되어야 하지만, 인민의 주체성은 은폐되고 ‘국가’의 절대적 권위가 지속되었다. 결국 선거를 통해 권위적인 정부, 전체주의적 정부가 합법적으로 등장했다. 결국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역사적, 사회적, 현재적 특히 “인민적” 성찰과 ‘뒤이은’ 실천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민주주의의 진단 - 정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대표성의 위기

- 한국 정치의 형식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제(represent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물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대표제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먼저 근대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1)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의 정착이 첫 단계이고, 2) 직접/참여/토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어진다.
- 대표제의 발전은 1)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선출된 대표에 대한 견제, 곧 권력의 분립이나 임기의 제한 같은 장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2) 좋은 대표의 선출로도 가능하다.
- 그동안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화 공고화 이론에 따라, 주로 민주주의 발전의 길과 선출된 대표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대표의 선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민주적 대표는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표는 부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절차적 정당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뽑힌 대표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좋은 후보인가에 대한 논의나 반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 또한 진보/보수 등 이데올로기적 균열이 선거에서의 선호와 정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좋은 대표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정치적 대표들이 단순히 보스 정치인, 정당이나 지역유권자들이 대리인의 역할에 그치면서, 국회에서 정치적 대표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정치적 합의와 발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 대표성 위기의 원인

- 한국에서 대표성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에 잘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1) 민주화 이후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킨 측면과, 2) 제도만능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 먼저 진보진영은 한국정치를 이데올로기 지형이 왜곡된 상황에서 보수정당들이 패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정당들의 독과점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해왔으나, 이것은 민주화 이후 제도정치 일반,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야기했다. 또한 탈정치적 도덕주의를 설파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야합과 부당거래로 일반화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주도한 시민운동 역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도덕적으로 분리하면서 정치혐오를 가중시켰다. (깨끗한 시민사회, 시민운동과 부패한 정치사회, 정치인의 이분법). 낙선/낙천운동 역시 부패한 정치인을 낙

선시킨 성과와 더불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 운동의 주역들이 직접 정치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 현실과 필요를 인식하면서 상반된 주장을 해, '정치인이 되면 다 똑같다'는 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 한국에서 제도만능주의는 정치 발전과정을 선진국 제도의 수입과정으로 대체하는 인식과 결과를 낳았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과 학자들을 막론하고 한국적 현실이나 한국적 비전을 고민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해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내려는 외삽적 시도가 지속되었다.

- 이러한 서구 정치제도의 신성화는 한국적 적용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낳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또 다른 제도의 수입과 적용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이효빈 (광주여성재단 연구원)

1. 문제제기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복지 정책으로, 여성 · 보육 · 국민연금 ·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무상 보육 대란, 고교 무상교육 백지화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 대선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 이행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박근혜 대선 공약과 공약 이행을

가. 박근혜 대선 공약 (복지 분야)¹

□ (대선 공약 중 선거기간에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 · 보육 · 노인층의 복지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춘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1) 편안한 삶 분야

<표 1> 편안한 삶 분야 공약과 내용

분류	소분류	구체적 내용
복지 사각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기존수급자에 대한 급여주선 증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 빈곤예방 기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 장려 세제 적용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 일자리 지속적으로 확충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급여수준
의료비	<u>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u>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 보험으로 급여 추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소득수준에 따라10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한금액 설정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 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1) 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 신설하여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노후지원	<u>기초연금 도입</u>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 연금화,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개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u>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u>	2014 ~ 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 신규 창출

(2) 행복한 여성 분야

<표 2> 행복한 여성 분야 공약과 내용

분류□	소분류□	구체적내용□
여성인재□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기관, 정치계 여성 비율 확대 → 여성 대표성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돌봄 서비스 유형 및 임금 체계의 표준화 도입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개선
임신과출산□	<u>맞춤형 임신·출산비용지원 확대</u>	저소득층가구 →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 · 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치료 지원 산전 방문간호서비스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 접종비 무상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진료 경비지원 분만 통합치료 센터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u>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u>	현행법상 8시간 규정된 일일 근로 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의무화, 임금삭감 금지
	<u>‘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u>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새아기 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일정소득 이하에 정액 지급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셋째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가정에 주택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50개씩 신축,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 국공립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 강화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 서비스 제공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u>여성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u>	현행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 · 출산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다양한 □ 가족 □	<u>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u>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생활지도사 파견 멘토-멘티연계 멘토링 사업
	<u>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u>	아동양육비 현 5만원⇒15만원 아이돌보미,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책임보 육 □	<u>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u>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전액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차등지원

나. 박근혜 대선 공약 이행률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 분야로, 복지분야의 공약으로 채워져 있는 선거공약 영역은 '편안한 삶' 영역과 '행복한 여성'영역 두 가지이다. 이 두 영역의 완전 이행률은 각각 75% 와 52%로 높게 나타났다.²

<표 2> 대선 공약 이행률³

분류	소분류	완전 이행	후퇴 이행	미 이행	비고
복지 사각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소득 기준선 297만원 ⇒ 485만원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조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2014. 12. 9 기초 생활 보장법 국회 통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인력 6,000명 확충
의료 비 노후 지원	<u>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u>		○		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은 미이행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기존 3단계 등급구분에서 7단계로 후퇴 시행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13년 9월 시행령 개정 공포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16. 7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 65세부터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² 중앙일보.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률 42%, 국민대통합 공약 0%. 2016. 2. 22.일자

³ 저자 재구성,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평가. www.ccej.or.kr (2016. 6. 2. 검색)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치매특별등급 (5등급) 시행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공			○	
노인	<u>기초연금 도입</u>		○		기초연금법시행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
	<u>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u>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여성 인재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		여성의원 증가: 31.7 ⇒ 34.1 여성교장교감 채용목표제 도입, 여교수 확대 추진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새로일하기 센터 20개소 증가 여성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중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서비스 표준화 지침 보급 중, 임금 표준화는 시범 적용
임신 과 출산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고용 비율 산업별 평균 60%⇒70%로 확대
	<u>맞춤형 임신 · 출산비용지원 확대</u>	○			난임부부 지원 예산 확대 플로스사업 지원예산 확대 저소득층 가구 시범사업실시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		복지부 예산 편성
	임신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			전 현재 25개소 지원중, 헬기착륙장건설 외래산부인과 8개소 신설 등
	<u>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u>	○			근로기준법 금지 조항 신설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300인 미만 기업 적용
	<u>‘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u>	○			시행령 개정
	새아기 장려금 지급	○			올해부터 적용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나이 및 소득제한 축소 적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150개 신설
	부모선택권 보장된 맞춤형보육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영아종일제 대상이 0~2세로 확대 16년 380개로 시간보육반 확대
다양 한	<u>여성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u>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연령 축소
	<u>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u>	○			실시예산 확보 다문화 지원법 통과

가족	<u>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u>		○		임대주택 22세대 공급 기재부와 재정문제 논의중 월10만원으로 축소 지급
책임 보육	<u>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u>		○		0~2세 전계층 지원 확대

- 편안한 삶 분야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되었고, 기초연금은 65세 전체 노인 20만원 지급에서 노인 70%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 하는 방안으로 후퇴되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3대 비급여의 일부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 행복한 여성 분야는 이행률 75%로 매우 높다. 행복한 여성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상보육 확대였으나 예산 문제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로 놓여있다.
- 이와 같이, 공약이행율이 높지만, 공약을 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공약률이 얼마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단순 이행률을 판단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맞춤형 빈곤 정책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조 개정된 것으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빠달 도입' 같은 경우, 실제 남성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신청하는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간을 마련했는지에 따라 이행률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양적 이행률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질적 이행률에 대한 기준을 두고 질적 이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공약 이행률에 대한 질적 분석

- 완전이행률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된 정책들 중 대선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정책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가. 맞춤형 · 임신 출산비용지원 확대⁴

- 맞춤형 · 임신 출산비용 확대 지원의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 · 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고위험 임신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 접종비 무상 지원 등이다.
- 공약 이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단,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기조에 맞춰, 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사업의 경우 지원 예산을

⁴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참고

확대 하여 13년 141억원이었던 것을 181억원 까지 확대 하였다. 현재 85,312명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 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사업의 경우 2013년 64,584건을 지원하였고, 2014년 76,214건을 지원하였다. ■ 고위험 임신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8,440명이 혜택을 보았다. ■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 접종비 무상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 이행되기 시작하여 13종의 백신에 대하여 월평균 837,442건을 접종하여 실시하였다.

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⁵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내용을 살펴 보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 공약이행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의무화의 경우, 근로기준법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실제로 638명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였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에 대해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었다.
-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638명이었으며 통상임금의 60%를 받았다. ‘육아휴직’이나 ‘임신기간 근로 단축제’ 같은 제도는 회사가 승인하고 나서 휴가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강제 적용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여성이나 임신부들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눈치가 보여 유명 무실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 FGI에 따르면 기업에서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를 실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직, 이를 어겨 적발된 회사는 한 건도 없다.

다.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⁶

- 아빠의 달 도입 제도를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하는 ‘육아휴직’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제도이다. ‘아빠의 달’ 도입 사업의 경우 14년 9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빠의 달 도입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2015년 1분기, 529명으로 집계되고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7%에 해당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FGI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회사 내에 분위기가 아직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⁵ 전문가 FGI 실시, 2016년 5월 24일, 광주여성재단에서 가족과 출산 관련한 제도들에 대한 전문가 면접 조사 실시함

⁶ 전문가 FGI 실시, 2016년 5월 24일, 광주여성재단에서 가족과 출산 관련한 제도들에 대한 전문가 면접 조사 실시함

다.

라. 다문화 가족의 적응 방안

- 다문화 가족의 적응 방안 내용을 살펴 보면,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 생활 적응자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실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이다.
- 공약이행 내용을 살펴보면,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사업에 대해 소득과 기간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 생활 적응자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5, 6월 실시계획 중에 있다.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통과 되었다.
- 전화 통화를 통해 몇 군데 다문화지원센터에 확인 결과,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주여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움이 많았다. 다문화 가족의 적응 방안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4. 소결

- 양적 분석을 통해 본 단순 공약이행률은 높을 수 있으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실제로 공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거나 다문화 가정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법에 실효성이 없다면 공약을 이행했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을 이행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여 그 정책 만족도 또한 증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들 대부분은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일시적 예산을 편성한 것에서 그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와 관계가 깊은데,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14년에는 1.21이고 2015년에는 1.24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좀 더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한국민주주의 진단 - 51 대 49의 정치, 혐오의 민주주의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치는 51 대 49로 승패가 갈라지는 다수결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사회를 ‘혐오의 연쇄’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를 설득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적대를 키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51 대 49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의 모든 자원을 이분법적 적대전선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류와 공동체 보편의 가치들은 노골적 적대를 은폐하는 포장재로 전략하고 전선으로 쉽사리 동원되지 않는 다원적 가치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담뱃값 인상과 대북 선전전 강화는 생명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학생 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가 달라졌다.

51대 49의 정치에서 승자는 51의 승리를 살인면허가 포함된 백지수표로 여기고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패자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며 승자가 누릴 자유에는 법치의 위반도 포함되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으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위협에 놓이고 있다. 반면 경찰들은 인도를 가로막거나 차벽으로 시위대를 봉쇄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생명을 잃게 했으면서도 사과 한 마디가 없다.

51대 49의 정치에서 패자는 49의 패배를 무능력과 무기력의 변명으로 삼고 있다. 조사권 없는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고 반인권적 테러방지법을 방어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모자란 2%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2%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행동에는 무관심과 태만으로 일관했다. 광화문의 시위대가 물대포로 해산되고 한국 노동계의 수장이 사찰에서 끌려갈 때조차도 그들은 불법·폭력 시위 엄단이라는 정부여당의 협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적대를 통해 선거의 승자가 된 여당은 49%의 국민을 유령으로 만들면서 51%의 적대를 강화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내 편이 아닌 전부를 배제하면서 적대를 강화하고 혐오를 증폭시켰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달리 강하고 약함, 많거나 적음처럼 연속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연쇄적 반응을 불러온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자가 덜 강하고 덜 많은 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끊임없는 혐오의 연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강자에게 혐오 당한 약자는 더한 약자를 물색해 자신이 받은 혐오를 되갚고자 한다. 취업 실패가 일시적 불운이 아닌 영구적 패배가 된 시대에 그 패배자는 자신보다 더한 약자를 찾기 위해 강남역 여성화장실 주변을 배회하게 되는 것이다.

현 정권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이고 지금 한국사회가 지옥이 된 것은 궁핍한 삶 때문이 아니라 혐오의 연쇄 속에 놓였기 때문이다. 혐오와 증오를 통해 전선을 만드는 게 바로 파시즘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파시즘에 반대하는 평화의 연대를 이끌리라는 것은 난망한 기대 같다. 적대를 넘어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바람이 원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계속해 여당과 함께 51 대 49의 승리에 목을 맨다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영원히 혐오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 -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최동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정치법제 연구원)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한국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들은 그들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권의 연장이나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내년이면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그리고 제6공화국을 탄생시킨 현행 헌법의 개정의 시도로 그 당시의 헌법을 개정한 자들의 의도가 주로 정권의 획득을 위한 “정략적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국가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와 달리 지역적 수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지방 정부보다 중앙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국가 형태인 단일국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기능적, 수직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집중되는 점과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우며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구현으로서 책임정치의 실현, 민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정부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승자 독점의 제왕적 대통령 보다는 협의제 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대안으로서 거론되기는 하나 전자로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제에 내장된 속성적 폐해는 치유되기 어려워지며 후자는 권력의 특성상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하여 국정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 한국적 분단 현실에는 지난한 과제가 되며 정부의 불안정만 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권력을 나눔 대신에 권력 독식을 조장하는 단일 구가제와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사회·정치 지도자의 도덕개념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결여 등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만성적인 정치 사회 경제 위기를 조장해 왔다고 본다.

의원 내각제 여러 유형중에서 정부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적 불신임제 등을 도입하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한국에 적용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2공화국 체제 당시 1960년대초의 한국이 후진적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순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장면 총리의 리더십이 취약하였으며, 의원 내각제 하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집권 민주당은 신. 구파 파벌의 분당을 통해 양당제로의 정립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등 정당정치의 낮은 제도와 수준을 정비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초의 상황의 은 모형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사회 환경도 다원화, 복잡화되고 지역 세대 계층간의 갈등 등으로 이를 정치에서도 잘 흡수할 수 있는 협의제 민주주의로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내각제를 구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 민주주의 진단 - 정치적 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전문성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치권 외부의 인물이 부각되고 소위 말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정치권 외부로부터 영입된 인물들이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성 싶다. 최근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반기문 대망론’이 불거졌다. 반기문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베테랑 관료다. 그러나 정치인이었던 적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정치로부터 오랜 시간 떠나있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의 두 가지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우선 기성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기성정치인들이 부정부패, 비리와 결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차라리 정치적 관여가 없었던 정치권 외부 인사가 낫다는 여론을 불러왔다.

다른 하나는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다. 한국 정치에서는 오히려 정치 경험이 많다는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곤 한다. 기성정치권에 오래 몸 담았다는 것은 노련한 정치 전문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기성정치권의 낡은 관행에 익숙한 구태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기성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제 몫을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 외부인사들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반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성정치권이 불만스러워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그것은 정치불신을 조금도 줄이지 못한다. 그 동안 기성 정치권은 정치불신을 의식하여 정치권 외부로부터 일명 ‘새로운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피’는 정치권을 혁신하지 못했으며 곧 ‘기성정치권화’ 되어 갔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여전히 기성정치권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 외부인사에 대한 의존 경향은 정치적 전문성을 폄하하는 풍토를 조장함으로써 유능한 전문 정치인이 성장해 나갈 기반을 훼손한다. 정치권에도 엄연히 오랜 시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참신한 외부 인사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들여 습득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 안되듯이 구태정치가 싫다고 해서 정치적 전문성마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을 혼자서 해 나갈 수는 없다. 더구나 선거를 통해 다수 대중에게 선택되려면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근대정치는 정당정치와 떼어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정당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장집 선생처럼 유럽식의 계급정당만이 살 길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정당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면 정당정치의 논리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럴 때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 정당 밖의 일반국민들에게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와 경험 없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정치신인 당사자들도 신드롬과 같은 높은 인기만으로 정치인 혹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물론 현실정치는 그렇지 않다.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대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대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정치신인출신의 유력 대선후보가 많았던 만큼 그들의 약점 역시 잘 드러내준 선거였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정 운영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문재인의 첫 출발은 대선출마로부터 1년이 채 되기 전에 시작되었다. 1년도 되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2012년 말에 펴낸 문재인의 자서전 『1219 끝이 시작이다』에 보면 그가 2011년 정치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모든 것들이 정치적 ‘첫경험’이었다는 서술이 나온다. 2011년 가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는 문재인 후보의 첫 지원 유세 경험이었으며 2011년 12월 처음으로 정당에 입당했고 2012년 총선이 그의 첫 번째 선거 출마였다. 대선후보 경선에의 참여도 처음이었고 그 이후 대권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 역시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정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신인치고 문재인은 개인적 역량을 상당히 잘 발휘한 편이었다. 2013년 초 민주당대선평가위원회가 수행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TV 토론’, ‘상황 대처 능력’ 등 후보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라든지 ‘유권자 신뢰 획득’과 같이 오랜 시간의 누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당조직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에서 매우 박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문재인 후보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더라도, 이른바 친노 인사 9인의 사퇴가 있었고 이해찬 당대표의 퇴진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해찬 당대표가 끝내 퇴진하고 나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친노 인사들의 임명직 포기 선언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문재인 그 자신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도 뒤따랐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끌려 다니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신인이었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그의 자서전에 문재인은 당시의 심정을 서술했는데 당 지도부가 갑자기 사퇴하고 나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워주고 캠프들 사이, 그리고 캠프와 시민사회를 조율할 비중 있는 인사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한다. 경선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팀이 모두 사퇴해버렸을 때야 비로소 방송연설이나 토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따라서 자신이 직접 손보고 준비해야 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경험과 준비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물론 정치9단이었던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일은 중차대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의 리더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계파갈등으로 어지러웠다 한들 자신의 소속 정당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국가를 맡기고 싶은 유권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또 한명의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는 또 어떤가? 안철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일약 ‘안철수현상’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아마도 우리정치에서 ‘인기’만으로 당선권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정치신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2012년 9월, 대선을 석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문외한’이었다. 안철수는 문재인보다도 더 ‘초짜’였던 셈이다.

그렇기에 안철수 역시 대선기간 내내 정치적 경험부족이라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2012년 대선국면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는 준비부족과 역량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정했다. 당시 안철수와 함께 일했던 여러 사람들이 책으로 펴낸 후일담을 보면 이들 모두가 준비부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진심캠프에서의 66일간을 일지 형태로 정리한 이유미(『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 나무의숲, 2013)는 당시 진심캠프에는 본부장들과 실, 탐장급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선거 초짜’였다고 지적한다(24쪽). 역시 진심캠프에서 활동했던 강동호는 『안철수는 왜?』라는 책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진심캠프를 “뒤통방”에 비유하기도 했다(25쪽).

주목해 볼 점은 이처럼 캠프를 준비가 미비한 채로 남겨둔 것이 바로 안철수 본인의 뜻이었다는 점이다. 대선 출마결심을 굳히고 몰래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오해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는 하지만(금태섭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2015, 64쪽) 2~3개월 만에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진심캠프 내에는 안철수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의 선거운동은 민주당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생각들을 널리 퍼져 있었던 듯 한데(이수봉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세상 새정치』, 아침이슬, 2015, 47쪽) 문재인 후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민주당을 선거‘초짜’인 안철수와 선거‘초짜’들로 이루어진 진심캠프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니 대단히 무모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경험이나 감각이 없기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안철수가 문재인과 달리 대선결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창당을 시도하기도 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하기도 하면서 정당인의 길을 걸었다는 점은 자신의 경험부족, 준비부족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신인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문제다. 정치 영역에 첫발을 내디딘 정치 신인은 필연적으로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외부에서 아무리 높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설사 대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경험 부족의 대가는 대통령과 국민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길러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의 정치적 전문성이란 구태 정치로 비치지 않는 정치적 전문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일반시민들도 정치‘문외한’에 ‘묻지마’ 열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정치 역시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2. 한국 민주주의 미래: 토론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곽송연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앞서 밝혔듯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우려할만한 위기의 수준이라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단순히 민주주의 수준의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제 자체의 붕괴 위험을 노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양날개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노골적인 자유주의의 부활이라는 극단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되돌아보면 20세기 냉전질서 속에서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강점은 포용성이었다. 이념과 체제대결의 극단에 위치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승리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가 내세운 민주주의의 강점을 포용하고 흡수한 것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역시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재사유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와 의회권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유화된 공론장의 질서를 회복할 새로운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즉 국가권력, 자본권력의 시민사회 장악 시도를 폭로함과 동시에 생태, 환경, 성, 노동 등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고, 표출할 수 있는 신사회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리더십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작은 단위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연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과제 - 젠더관점에 기초한 성찰,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대, 정치 권력 주체의 교체⁷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20대 총선은 젠더정치와 청년정치를 실종시킨 선거

→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총선과정은 젠더 관점에서 최악의 선거 모습을 보여주었음. 여성정책이 실종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데 앞장섰으며, 여성이 아닌 정부와 정당의 흥위병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하고 (새누리당 최연혜, 신보라, 전희경, 김순례 등⁸ 후보의 순번을 바꾸고(더불어민주당), 남녀 교호순번제 자체를 지키지 않는⁹ 등 비례대표와 여성대표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훼손시켰음. 또한 당선된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의원 또한 고령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내 다양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치도 완전히 실종. 모든 정당이 청년을 호명했지만 정작 청년대표는 실종. 19대 국회에서 9명이었던 20-30대 국회의원(20대 없음)은 20대 총선에서 3명(지역구 1명: 김해영, 39세, 남,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2명: 신보라, 33세, 여, 새누리당 & 김수민, 29세, 여, 국민의당)으로 60%나 줄었으며, 비율은 3%에서 1%로 감소

→ 20대 총선은 역대 가장 고령화된 국회. 2015년 대한민국 국민 평균연령이 40.8세인데 20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40.8세보다 15세나 많은 55.5세. 9대 총선(53.9세)보다 두 살 가까이 더 늘어났고, 1대 총선(1948)때의 47.1세보다 8살 이상 증가. 20대 국회는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표되고 20-30대가 전혀 대표되지 못하는 국회

→ 20대 국회는 평균 50대 이상, 대학원 졸업, 평균 41억의 재산을 가진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이러한 인적 구성은 기존 정치권력을 독점한(남성화된 남성)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는 증거. 이러한 구성 하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 특히 구조적·제도적으로 배제된 소수집단의 이익이 대표될 수 없음. 그리고 그 결과는 여성혐오(와 여성살해)와 헬조선으로 명명되는 민주주의의 후퇴

⁷ 이하 내용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이름이 공동주최한 20대 총선 평가 집담회, 'Beyond 20, Toward 2020: 젠더, 청년, 민주주의'에서 권수현과 이진욱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대표)이 작성한 발표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⁸) 최연혜(비례5) 전 코레일 사장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음. 신보라(비례7)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에 출마하는 최홍재 후보 선거사무장의 아내로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명 서명을 받는 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했고, 그 이유로 공천받음. 김순례(비례15) 대한약사회 역사학 회장인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나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음. 전희경(비례9)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아닌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된 만큼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라 주장하면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

⁹) 원외 소수정당 중 비례대표 순번을 지키지 않은 정당 다수. 기독교자유당은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9명을 남성에게 배정했으며, 통일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4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했고 기독교도 3명 중 2명을 남성에게 배정. 이외에도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불교당, 한국국민당은 비례대표 한 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

유권자가 뽑은 300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출처:“[4·13 선거혁명 당선자 분석]국민의당 60억 > 새누리 42억 > 더민주 36억 > 정의당 3억.” <경향신문>2016.04.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10015&code=910110)

→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성의 구성이 바뀌어야 함. 다시 말해, 50대 이상의 남성에서 여성과 청년으로 교체되어야 함. 이들이 만드는 민주주의가 기존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후의 문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만함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음

→ 현재 30%의 절반도 안 되는 여성대표성과 겨우 1%밖에 안 되는 청년대표성으로는 남성화된 한국정치를 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대표성의 강화와 청년대표성의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함. 그리고 여성대표성 강화 문제와 청년대표성 확대는 문제는 분리되어 사고되기보다 50대 기득권 남성에게 의해 독점된 정치권력의 견제와 교체의 필요성과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음. 현재 법으로 규정된 여성할당제, 특히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비례대표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공천 과정을 투명화시키는 것, 더 나아가 (현)법에 남녀동수를¹⁰ 명문화하는 것 등이 있음(이진옥 2016).¹¹ 이러한 제도개혁은 여성대표성만이 아니라 청년대표성을 확대·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됨. 특히 한국사회에서 호명되는 청년이 대학생 남성청년인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배제되는 여성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각 정당 내에 존재하는 여성조직(women's wing)과 청년조직(youth wing)의 체계와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들 조직과 구성원이 선거시기뿐 아니라 일상적 정당활동에서도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함

¹⁰ 최근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30에서 50-50으로 이동 중이다(UN Women). 이 경향은 2000년 대 초부터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의 남미 국가들이 뒤쫓고 있다. 멕시코도 2014년 2월 개헌을 통해 동수를 도입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97년에 14.2%에 불과하던 여성 비율은 2007년 22.6%, 그리고 동수법이 통과한 이후 2015년 선거 결과 42.5%에 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50-50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최근에는 세네갈에서 동수법이 통과되었다. 남아공의 최대 정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또한 동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튀니지는 2011년 동수법을 도입한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되었다(IPU 2015; 이진옥 2016에서 재인용).

¹¹ “[혐오사회]6회 겹겹의 젠더불평등 해소, 남성에게만 맡길 것인가?” <경향신문> 2016.05.17. <http://h2.khan.co.kr/201605171100011>

→ 이러한 대안들을 제도화하는 작업은 현재 정당과 국회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움. 따라서 여성 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당과 한 국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정당에는 소수이지만 여성 또는 청년을 대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이 존재. 따라서 현재의 한 국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 내 행위자와 정당 밖 행위자 간에 네트워크(network or caucus)를 형성하는 작업이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대 국회를 압박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권력 주체의 교체를 이뤄야 함

한국 민주주의 과제 - 미래 전략과 리더십

김재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 전략 측면: 권력거리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중진국의 과도기에 있는 국가이다.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지 모르지만 아직 여러 사회적인 분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는 권력거리를 들고 싶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소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집단과 그냥 평범한 국민들 간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의 부처장의 경우에는 엄청난 국가차원의 특혜를 누리고, 회장님이나 타는 최고급승용차를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한다. 이와 동시에 종종 국가의 것들을 무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일하기에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렇다고 그리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게다가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연히 계급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뽑아주고 만들어준 국민이 더 존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철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무시 및 하대하곤 한다. 그리고 국민의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반대로,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국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특혜도 없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활동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권력거리가 좁은 나라와 넓은 나라 간에는 보이는 모습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권력거리가 좁은 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으며,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은 옆집아저씨 대하듯 거리낌 없이 정치인들에게 제언할 수 있고, 정치인들 또한 그 제언을 귀담아 듣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한 지역에서 4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또한 국민이 한 정치인에게 무릎까지 꿇었지만 그 정치인은 그냥 무시하고 가 버렸다. 이게 이 나라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권력거리가 필히 가까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인이 조선시대의 양반계급이 아닌 단순히 국민대표일 뿐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계급 사회가 아닌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성숙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2) 리더십 측면: 슈퍼리더가 필요한 대한민국

리더십 이론에는 거래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한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어,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리더십은 단순히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다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으로 슈퍼 리더십(super leadership)

을 제안하고 싶다.

슈퍼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쉽게 말해 팔로워들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십으로, 슈퍼리더 하에서 팔로워들은 자신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게 하는 셀프리더십을 갖게 된다. 즉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슈퍼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과 달리 지원의 역할이 중시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를 이끌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동기부여 하는 기존의 리더십과는 달리 팔로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의사 결정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끌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그를 따르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자연스레 스스로 리더가 되며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선진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정체성과 국민성이 강한 국민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며, 이들의 경우 매사 국가의 운영이나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정치인들만이 참여하는 국가운영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룩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리더가 되는 나라, 모두가 리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든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김지원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조교수)

앞서 토론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실상,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식적 논쟁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하이에크(신자유주의 제창,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주장한 학자)와 케인즈(국가 개입에 의한 계획경제, 거시경제학을 강조한 학자)에 관한 논의이다. 다시 말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이끌 주체가 시장이 되어야 하느냐 정부가 되어야 하느냐의 끊임없는 논쟁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하이에크식의 신자유주의 또는 케인즈식의 거시경제적 명확한 분석에 입각한 정부개입 어느 것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더욱이 민의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정치논리까지 개입되어 그 폐단이 심하였다.

그렇다면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나 전문행정가라 하더라도 경제민주화에서 강조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관료와 정치인과 국민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데 공헌하였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그가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솔직히 전달하고 노변정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의 수호, 정의실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급선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부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재벌개혁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보장받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기본적인 복지시스템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1년 연속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한창 공부를 하거나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10-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으로 국민들이 생존까지 위협받지 않는 경제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는 힘써야 한다.

얼마 전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157개 나라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과 어려울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등 정서적항목도 반영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는데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11계단 하락한 58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2위)가 가장 높았으며 태국(33위), 대만(35위), 말레이시아(47위), 일본(53위), 카자흐스탄(54위)도 한국보다 더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다. 동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많은 나라가 불평등 심화를 대가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며 통계를 살펴보면 불평등이 적을

수록(less inequality)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에릭 매스킨(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프린스턴대 사회과학과 교수)은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복지를 통한 경제민주화이다.

2004~2014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유인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다. OECD 국가 행복지수 1위를 달성한 덴마크의 특징은 중산층이 두텁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작은 단위라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조합원과 정부가 언제든지 대화의 준비가 돼 있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복지제도 역시 잘 되어 있어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시설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가? 덴마크의 경우 누군가 산업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면 정부가 교육훈련을 보내준다. 이는 최소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학위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그 후 정부가 일자리를 찾아주면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다시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준다. 그런데 구직자가 이를 다시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상형(ideal type)은 필요하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공적보험의 큰 기틀을 다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민-관 서비스 연계,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심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민주화를 위해 생산적 복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민의를 모아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는 일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될 것이며 정부나 시장 어느 혼자만의 외로운 독보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밝은 등불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김현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지난 5월 말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중세 유럽의 문화와 건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로텐부르크(Rothenburg ob der Tauber), 바흐가 종교음악가로 활동했던 라이프치히(Leipzig), 그리고 상업과 금융의 도시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를 거쳐, 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 중에서 단연 인상적인 곳은 독일 국회의사당(Bundestag)이었다. 비단 그 곳이 베를린 시내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돔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압도되었던 것은 정치의 “투명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체화 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건축양식에 고스란히 담아내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위치한 돔 아래에는 본회의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고, 의원회관 건물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일하는 사무실과 회의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의원회관에서 ‘직접’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997년 새롭게 지어진 이들 건물은 정치의 ‘투명성’을 모토로 지어졌다고 한다.

독일의 것이 반드시 옳고 우리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현재 한국 국회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내년이면 개헌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얼마나 심도 있고 세밀하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새롭게 증축한 한국 국회 의원회관은 단지 일하는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의원 일인당 구 의원회관의 두 배에 달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효율성은 쾌적해진 업무 환경에 반비례하고 있다. 대표성(representation)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회 담장을 넘는 순간 자유위임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밀실과 야합의 늪에 빠지고 만다. 국가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둘러막기 식으로 짬짬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는 위임입법을 통해 입법부가 정해놓은 법률의 합법적 틀 속에서 세 부시행령으로 입법부 우위에 서고자 한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사법부(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맡기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논쟁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상징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집합되는 하나의 장으로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만 그 갈등을 푸는 방식이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된다면 갈등의 고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띠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즉 갈등 해결사를 원하게 되는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도외시하는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새로움’은 기대와 희망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치의 투명성에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

가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내생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학계, 시민사회 등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참여라는 외생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정치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된다면 적어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민주주의의 결을 섬세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모춘홍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도된 것이었으나 상당수는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논의를 나의 관심사로 좁혀보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이다.

이제 막 학위를 받고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나에게 2016년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매우 복잡다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정부의 선택을 놓고 찬반이 있으며, 나아가 현재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서 ‘제재’ 대 ‘대화’를 선호하는 양극단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서 절반으로 갈라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일원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 아니면 ‘반대’만 할 것인가? 답은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에 대한 내적역량 강화이다. 다가오는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할 수 있고, 나쁠 때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준비는 일부 관료, 정치인, 학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된 과업이 아니다. 전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전 국민의 동참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통일시대를 짊어질 청년세대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통일의 방식을 놓고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통일과 함께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놓고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아니,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한민국은 통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통일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서 통일한국을 위한 미래전략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국내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미래의 인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통일을 고민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통일 준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도 통일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에 대한 준비는 정부주도의 리더십인 아닌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적인 리더십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6년 공공 열어있는 남북관계의 엄중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이며, 이를 위한 준비는 국민이 스스로 통일을 준비하고 내면화하는 과정과 함께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과제 -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 “People, over profits and beyond value”

박현우 (통일의 별 대표)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어 보이는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칼에 베어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를 소수 부유층과 특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단호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업의 논리가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도록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이자 또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의 대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체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자행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바로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업의 논리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정치권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권 스스로가 혁신과 개혁을 추동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는 1987년 뜨거웠던 여름, 6월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처럼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 주어진 환경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며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정직함으로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국가와 사회에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배려하는 사회.
2.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책임지는 참여와 투명한 과정 속에서 생산적 비판과 합의를 보장하며 사람다운 품격과 정의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3.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대리인이 아닌 삶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꿈을 실현하고,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어 생각의 힘으로 새로운 도전과 창의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위에 제시한 세 가지는 우리 민주주의가 최소한으로 지켜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한국 민주주의 가치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over profits and beyond value”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창출보다, 또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최고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사회.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함께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과제 - 봉기라는 인민의 가능성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사실 역사학자가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적 논의에서 한 가지를 제기하자면,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개념과 사건에 대한 제 논의를 제안합니다. 역사학적 입장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민주화-민주주의의 연속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한국민주화운동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돌베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같이 있는 오늘날, 동시대인이면서도 민주화운동의 밖에 있던 이들, 새로운 세대에게로의 전달’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정당한 기억의 공동체를 확산해가는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가 확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실천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를 민주주의 실천의 ‘새로운’ 지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봉기’입니다. 사실 ‘봉기’는 곧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사건이자, 전환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지향들을 하나로 합쳐주었다면, ‘봉기’는 오늘날에 정식으로 전해지거나, 이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순결한’ 민주주의는 ‘폭력적인’ 봉기와 같이 논의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과거 인민의 봉기는 꾸준히 민주주의 실현-민주화운동의 한 방법으로 모색되었고, 준비되었으며, 실천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 5·18민중항쟁은 ‘무장봉기’로서 남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인민의 봉기는 ‘폭력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테러리즘으로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군부독재의 폭력성과 대항저항을 단순히 ‘폭력’이라는 근대적 개념으로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관료제를 국가의 전체주의 도구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인민의 정당한 ‘봉기’는 새롭게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민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가, 한국사를 돌아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절대적 권력의 제도적 폭력 속에서 인민은 순응하거나, 도망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지만, ‘봉기’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된 3.1운동과 4.19의 사건은 인민의 적극적 저항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인민의 저항을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보면, 그들이 지배의 도구로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법리적 준거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이 반민주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인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봉기하면 안 되는 것 입니까? 물론 1980년처럼 ‘총’을 들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인민의 봉기는 무엇이며,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봉기’는 없을까요? 지금이 새로운 ‘봉기’가 일어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제도만능주의의 극복

- 정치의 제도만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적 발전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는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적 발전과 더불어 비제도적 측면, 정치문화의 발전, 시민의식의 성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 특히 정치문화의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쿠데타 방지법'이 제정된다고 쿠데타를 막을 수는 없다. 쿠데타를 한 정권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쿠데타를 방지하는 것이다. 제도의 수립,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인식 토대 위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 선진국의 제도를 수입과정에서는 그것의 한국적 변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단 해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실험을 지양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그것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유권자와 정치행위자들의 대응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제도 설계에 있어서 영미식/북유럽식(대통령제/의회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권력구조와 선거의 방식에 관한 한 완전한 제도는 없으며, 한국적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대안에 구상이 필요하다. 제한적 상상력을 벗어나야 한다.
- 좋은 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 동안 한국정치에서 확립된 것이 '공정하게 선출된 대표'였다면, 이제는 '좋은 대표'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 좋은 대표에게 필요한 자질과 덕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령,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중 어디를 더 잘 대표해야 하나, 국회의원은 정치적 판단에서 지역구민들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가 등)가 필요하다.

○ 시민적 역량의 강화

- 선거 때만 투표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정치의 변화란 불가능하다.
- 선거 때 주어진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 '시민'의 육성을 위해 '토의 민주주의'의 전면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교육과 시민교육에서 '토의'를 핵심적 방법론과 주제로 삼아야 한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정치적 토론과 논쟁의 기반이 부재하면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한계가 있다.
-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단순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좋은 정치, 좋은 대표에 대한 논쟁과 합의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 대표성의 위기 극복

-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급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개헌에 매달리는 것은 또 하나의 제도만능주의다.
- 오히려 작은 변화에서 새로운 정치의 비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당투표제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치는 제도자체가 아니라 반복적 연습과 좋은 선례의 출현, 계승에 의해 가능하다. 제도가 아니라 실천과 반복, 긍정적 평가가 중요하다.
- 민주화 30년을 맞아, 민주주의에서 좋은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좋은 대표와 좋은 시민에 대해 논의할 때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한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한국 민주주의 과제 - 적대에서 공감으로, 전선에서 연대로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형제복지원 500여 죽음에 눈감은 채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1987년 6월 항쟁은 6·29 선언 이후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 전선에 매몰되면서 7·8·9 노동자대투쟁의 외면하였다. 박종철의 죽음에 분노했으되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1987년은 그 자체로 87체제의 성격이 되었고 그러한 외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는 이분법적 적대 전선을 기반으로 하고 적대는 가치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매몰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방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여야 막론하고 선거 승리를 지상과제로 삼아 전선과 그 전선을 뒷받침하는 적대의 조성에만 골몰하였다. 그 결과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생존권은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사수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최근 유사 이래 최고의 단결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였다. 흡사 기계라는 적 앞에서 한국인 또는 인간 전체가 대동단결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동단결도 기계를 적으로 상정한 그 순간뿐이다. 뒤돌아서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러다이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기계를 개발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선거를 포함해 모든 이분법적 전선도 마찬가지다. 전선에 내걸린 깃발은 전선 이편의 총합이 아니라 전선 안의 이견과 갈등을 미봉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일 뿐이다. 그리고 강요된 전선 안에서 억눌렸던 이견과 갈등은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분파주의자가 아니라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한 소수자와 약자의 다른 이름이다.

세월호 사건의 슬픔에 공감해 모인 사람들을 6.4지방선거의 이분법적 적대전선으로 이끌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비할 데 없는 분노에서 비롯된 노동자 한광호의 자살은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공감은 연대를 낳고 연대는 실천적 고민 속에 본질에 접맥한다. 그러한 공감을 곧바로 실제 없는 적대의 도구로 삼고자 할 때 연대와 실천의 고리는 끊기고 만다. 반면, 본질적 분노에 대한 외면은 연대를 기대하는 약자들의 실천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그 약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대 없이 지지만 기다린 자들은 그것을 계급배반투표라고 부른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배반한 것 인가. 정권교체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미명 아래 인권과 생존권 투쟁을 외면하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신한 것은 야당 정치인들이었다. 이분법적 적대에 매몰된 선거 전선은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주변화하고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시빈민 등 주변계급을 과소대표하게 만든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1987년 7·8·9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해 그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투는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대표하는 대안적인 전선 창출에는 실패한 채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월호에 이어 강남역과 구의역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깊은 공감을 적대로 오판해 한쪽 편으로 줄 세우

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감과 적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적대는 공감으로 힘을 얻고 공감은 연대와 실천을 통해 본질적인 적대로 발전한다. 적대가 아닌 공감으로 연대하되 근원적 분노로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전선은 공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연대와 연대가 접합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전선에서 혐오의 민주주의는 화해와 평화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제 적대가 아닌 공감으로, 전선이 아니라 연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과제 - 미래 전략과 리더십

최동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정치법제 연구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다. 패배한 쪽은 여론에 두들겨 맞고, 승리한 쪽은 축제 분위기에 빠진다. 4.13 총선패자인 새누리당은 여론몰매를 맞으며 혹독한 4월을보냈다. 언론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평론가들을 모셔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오만함이 주요 패인이었다고 이구동성 떠들어댄다.

총선에 온 정신이 팔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공작만 일삼고 있는 듯 보였다. 각 당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정당 민주화는 사라지고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물갈이에 나섰고, 그 물갈이는 면접시험까지 등장시켜 생방송으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더 한심한 것은 여당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이다. 특정 정치인들을 공천탈락 시키기 위해 친박이 비박 의원들의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 그 진위를 둘러싸고 계파싸움 하느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의원들의 품격 없는 모습. 정치 엘리트가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들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를 할 자격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폴리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통치’라고 정의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것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따라서 정치란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를 뽑는 콘테스트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현안들과 맞서 싸워 국민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이끄는 통치(government)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실패 공천 파동이다. 그리고 공천과정 비민주화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학자 젤리노와 벨랑제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률 1%포인트 증가는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1.3%포인트 감소를 가져오며, 물가상승률 1%포인트 증가는 집권당 득표의 0.4%포인트 감소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추정할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는 공천 과정의 해프닝보다 박근혜 정부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더 잘 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취임 후 3년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성과도 없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물가상승, 청년실업 등 해운업 구조조정 등 각종 사회문제 살인 사건까지 굶직한 실정으로 좌초 직전까지 왔다. 그런데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계파싸움에 시간만 날리고 있다.

선진국은 법과 제도가 확립되고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질서의식 함양되고 성숙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계몽시키거나 교육을 통해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공공재인 교육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루어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보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복핵 문제, 노동개혁, 그리고 청년실업까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때다. 훌륭한 지도자는 철학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여소 야대 협치를 통한 창조하는 정치 섬기는 정치 더 큰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명분이 서고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1. 한국 민주주의 진단: 지정토론 녹취록

본 녹취록은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학술토론회를 현장 녹음하여 그 결과물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발언자의 동의와 허락없는 인용 및 전제를 금하며,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 및 수정을 절대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06-29



1부 토론 주제 1. 한국 민주주의 진단: 지정토론 30분(14:30~15:00)

○ 사회자 손혁재

: 네, 안녕하세요. 손혁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형식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6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특히 우리가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5년마다 어김없이 대선을 치르고,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때문에 이제 절차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고, 나아가서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가 목도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라도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신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6.29선언을 언급하셨지만, 5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12년 오늘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차벽’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행동자유권’이라는, 이 국민의 행복을 막고 있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차벽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시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또 촛불시위대가 모이는 곳마다 차벽이 시민들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정부는 또 이 직전의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포기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의 힘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토론회는 특정인이 발표를 하고, 그것에 한정하여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이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현재 1부의 여섯 분이 이제 발언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분이 5분 정도씩 발언을 하시고 나신 후, 발표하신 다른 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열 세분은 4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곽송연 박사님부터 5분 이하로 발표를 시작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발표자 1. 박송연 “한국민주주의의 지표”

: 서강대학교 현대 정치연구소 박송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쓴 내용이 개괄적이라서 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손혁재 선생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아주 손쉽게 다 풀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취지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주제는 ‘한국민주주의 진단’인데요.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에 평가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에 관한 기준이나 준거 틀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다르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다르고, 이렇다면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일단 한국민주주의를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준거 틀에 중요시 해왔던 ‘뤼시마이어’의 준거 틀을 가지고 진단을 한 번 내려봤습니다.

뤼시마이어의 준거 틀에 의하면,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볼 때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하나의 이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있을 텐데, 요거야 다 아는 부분이실 테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어서 참고했던 자료는 2015년에 발표된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자유화와 평등화 지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요,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지수인데 평가의 척도는 ‘10점 만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한국민주주의의 수준이 측정된 시기를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정치적 자유의 수준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측정값의 절반 이하나 그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진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자유의 수준도 측정값이 10점 만점임을 상기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이후에는 정치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더 후퇴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자(손혁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상은 아시아 중심의 민주주의 진단, 그러니까 준거 틀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현재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거라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첫째,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한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표선출은 박근혜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국정원 등 여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출된 의회에 대한 국가기구의 책임성 역시 뒷걸음질 치는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사퇴과정의 비민주성, 잇따른 공천파동, 잇따른 거부권 행사, 그 이후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이 행정부 군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의적인 국가 행위에 저항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보호 및 표현, 결사의 자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다른 지표를 참고하면, '프리덤하우스'의 지표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내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수준은 '자유국가'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에는 언론자유 지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분자유'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현재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는 한국이 이제까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하위인 70위로 보고됐습니다. 2016년 최근,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고요. 최근 불거진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와 전경련의 유착으로, 혹은 냉전보수주의 세력의 담론 독점과 사유화를 향한 극한적 욕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본래 '한국의 재벌과 보수 언론은 민주주의 진전 이전부터 여론의 주도자이자, 사회적 담론 권력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공론장 내의 불평등한 구조는 이미 종편의 출범으로 한차례 더 기울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시민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자본이 반공냉전주의 문법의 복원을 통해 제한하려 한, 이 사안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 민주주의'의 수준 진단은 역시 같은,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린 지표-자유와 평등화 지수의 변화-측정값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표 2>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영역에서 자유화와 평등화 지수는 평가 척도 10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등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수준이던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민주주의 진단의 준거 틀대로 시민사회 내 하층계급의 성장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립, 공고화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약한 기반을 보여주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자 2. 권수현 “한국 여성의 현주소”

: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권수현입니다. 뜻 깊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또는 젠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 한 의원 비서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당 최고위원회에는 형식적으로 여성위원이 형식적으로 두 명 정도 있을 뿐 아니라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 여성의원들에게 말 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여성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남성 의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이야기할 테면 이야기해봐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하는 정치 엘리트조차도 여성에 대해서,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사회 전반의 ‘남성화’된 또는 ‘여성화’된 표현과 태도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다행인 것이, 다른 토론회장에 가면 여성이 거의 형식적으로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어서 제가 여성/젠더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위축을 당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박수)

5분이라는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가 글에 쓴 내용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예전부터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젠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여성 개인이 치마를 짧게 입거나 그 여성이 행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상위직에 다수의 남성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그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들이 여성의 문제 또는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과 어떤 대척점에 서고, 남성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자”라는, 손을 내미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많이 들었고 지겨울 수도 있으나, ‘가부장적인 구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3. 김지원 “복지와 경제 민주화”

: 네, 안녕하세요. 한국복지대학교의 조교수인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달리 ‘복지’ 파트를 조금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29년이 흘렀습니다. 이 6월항쟁은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과거 군사독재의 종언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발독재 정치권력에 의한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이나 재벌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야기된 심각한 경제적 불평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용어를 섞어 놓은 거죠.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보통 지나친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행정 분야에서 ‘형평성’이나 ‘민주성’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게 된 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자생적인 민주화 가치까지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형’, ‘이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어이고 역사적으로,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핵심내용을 보자면, 특정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방지, 그리고 소유의 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해서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자유주의적 독재가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소득분배의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나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등을 위해서 재벌개혁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 시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었지요. 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라고 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및 신규순환출자금지, 그리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전면폐지는 아니어서 지금 엇그제 다시 또 의원 입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역대정부에 비해서는 그 래도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민주화인가라고 했을 때는, 과연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하고 있느냐는 것은 제 생각엔 아직도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만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다르지 않은데요.

한국경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 하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입니다. OECD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7%로 낮춰 잡았고, 주요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 중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선이나 철강, 해운업 근로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근로자들은 ‘쉬운 해고’와 ‘낮은 실업급여’로 인해서 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이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논란과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아무리 군부가 독재를 하더라도 실은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계획하고 일선에 나서가지고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국민들은 사실 정권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수재벌에 의해서 부가 편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군으로서 국부를 증대시켜 주기만 한다면, 어쨌든 대다수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까지도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에 조금은..회의적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이루는 정치인과 관료가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고 실제 실행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한 시장의 효율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적인 이념도 아닌 왜곡된 정치사상이 개입된 시장경제정책으로서 한국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가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다시 잠자고 있던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식이 깨어나서 시장이나 정부가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위민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발표자 4. 김현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판결의 정치학적 쟁점”

저는 발표를 맡은 김현진이고요. 일단, 저는 특히 한국민주주의 진단 부분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쟁점사안으로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현재 판결이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정치학적인 쟁점이나, 아니면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짧게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출범을 한 지, 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에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헌 정치사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심판 기능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판결이 점차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판결이 미치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 파장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시점에서, 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헌법재판소를 특히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

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통진당 해산심판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시민과 국가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 해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 직위를 박탈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을 어떤 법적인, 법리적인 쟁점사안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진짜 정당했는가?

그렇다면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의 위기와의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치적 역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쟁점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임명 구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는 구조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한, 정부가 3명, 국회가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3:3:3으로 봤다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제4부'로 봤기 때문에 각각 입법, 행정, 사법의 3등분할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기에는 이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틀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법부에 있는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적으로 서로 긴장과 갈등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독일의 한스 켈젠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연장선으로까지는 보지 않았었는데 과연 한국 정치영역에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가 제소권과 심판권 관련해서도 제가 낸 발표문에도 잠깐 있지만,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제소권과 심판권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명구조로 보면 결국은 정부 쪽에 더 편향된 인사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헌법조항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까지 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정치학적, 특히 우리 한국 정치 속에서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틀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발표자 5. 이관후 “대표성의 위기”

이관후입니다. 6월항쟁 29주년인데 이제 87년 이후의 크게, 이 '민주화'를 우리가 6월항쟁을 통해서 쟁취한 민주화라고 하면은, 아마 '절차적 정당성' 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쿠데타가 없었고 헌정의 중단이 없었죠. 30년 동안. 헌정의 중단 없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민주주의의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숭한 문제제기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전에 있었던 '불행한 헌정의 중단'이라든지 이러한 사태는 더 이상 나타나리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성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아마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도가 좀 미비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세대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여전히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절차적 민주주의에 다시 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던 것 같고요.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볼 때 ‘정당체제의 위기’, ‘사회의 불평등’,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중에 저는 저희가 잊어버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6월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가 뭔가? 87년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뭔가? 라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7년 쟁취한 것은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이죠. 87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국민 ‘직선제 개헌’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좋은 대의민주주의를, 헌정이 중단되지 않는 좋은 대의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주장이었고 그것을 이제 달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여전히. 오늘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잊어버린 부분이.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성의 위기’다, ‘대의제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년간 ‘좋은 대표’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표가 어떤 대표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뒤에 관심이 있냐 하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 대표를 뽑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항상 좋은 대표를 뽑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브렉시트’ 투표도 있었지만, 상당히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죠,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대의와 관련하여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항상 그런 거죠. 민주주의의 정답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좋은 대표인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자를 뽑는 것’, 즉 과정이죠. 뽑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유권자와 시민들이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누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선거과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투표 운동이 예요, 그냥. 시민의 역량으로서의,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선거는 전에 우리가 거의 한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었지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팬덤정치로 가버렸고, 그 부분이. 실제로 그 부분이 결국은 팬덤정치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가서 그 사람을 뽑을, 열렬히 지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심성을 이제 기른단든지, 이타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

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이제 그 민주화 이후 30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30년 전에 달성했고 그것을 꼭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은 누가 좋은 대표인가죠.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무수한 총선을 치렀죠. 여러 가지 선거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논쟁이 완전히 없었다,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논쟁이 난무했죠.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 정치가 꼭 이루어진 다음에는 좋은 정치인이 뽑히기는 어렵죠. 좋은 대표, 그것에 대해 논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민주화의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표자 6. 이효빈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안녕하세요. 광주여성재단 연구원 이효빈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출산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해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복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국민연금·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제가 특히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월 22일자 신문을 보시면 ‘집권 4년차 대선공약 평가’라는 걸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률이 42%에 달하고, ‘편안한 삶’ 영역은 75%, ‘행복한 여성’ 영역은 52%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삶 영역과 행복한 여성 영역 둘 다 이제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던 공약인데, 제가 너무 놀라서 75%나 달하냐? 52%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잘한 것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한번 보자. 뭘 이행을 했는지, 해서 제가 <표1, 2>에 보시면 21쪽~22쪽에 보시면 자세히 그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나와있는 걸 요약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동안. 이제 ‘맞춤형 임신·출산비용지원 확대’를 보면,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50억 편성이 되어있고 실시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141억원이었던 것을 181억원까지 확대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임 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에서 2013년에는 94,584건을 지원했는데 2014년에는 72,214건을 지원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13가지의 백신을 무료로 해주는 접종을 엄청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임신·출산비용지원 확대’에 보면 대부분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 공약에 있었던, 지금 제가 현재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공약이행률을 완전 이행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근로자에

게 현행 8시간 규정된 일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법제화라고 되어 있고요. 638명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해서 아빠의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장려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남성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상임금의 한 달 정도만, 통상임금의 100%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3개월로 늘어나는데 2015년의 1분기 동안 사용했던 남성의 육아휴직은 5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의 5.6%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적응 방안'을 보면, 입국초기 최초 1년, 막 온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생활 지도사'를 파견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지금 실시예정이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들을 보면, 정책들의 가장 큰 목적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 또 '다문화 가정을 적응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을 보면, 2014년에 1.21이구요. 2015년에 1.24입니다. 늘어났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의 실효성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638명이 지금 쓰고 있다고 했는데 '강제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직접 신청을 해서 회사가 허가를 하구요. 만약에 신청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백만원인데 그걸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이러한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전혀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빠의 달' 같은 경우는 5.6%가 지금 남성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남성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아시죠? 사회적 분위기. 책상 뺏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남성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제 저희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비용적인 측면'이 나왔고요. 2위가 '고용불안', 3위가 '일 · 가족 양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용문제'와 '고용불안', '일 · 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2016년 '제3차 저출산 · 고령화 계획'에 정부가 낸 것을 보면,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임금피크제', '청년인턴제', 그리고 '성과연봉제'입니다. 그럼,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여성복지정책, 즉 다문화정책을 보면, 다분히 이주여성 위주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초기에 파견사를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오기 전에 한국에서 2, 3개월 동안 시험을 보시고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는데, 그 파견을 또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통계를 내면, 이것은 다문화센터의 통계인데요. 베트남 여성의 경우, 소위 '도망'가죠. 그래서 결혼 한다고 속이는 사기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셔서 여성의 30%가 도망을 가시는 거죠. 다른 데로. 그런 경우에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한국남성, 둘 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이주여성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복지욕구를 충분히 조사하고, 가능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자 손혁재

이제 저희가 기본적 토론은 끝났고,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겠는데 뭐, 특정하게 이 토론은 특별히 일부러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토론으로 이야기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중들께서는 혹시나 질문지를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적절한 시점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저로 인해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셨던 권수현 여세연 부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두 번쨰 기회가 돌아오시겠습니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1. 한국 민주주의 진단: 종합토론 녹취록

본 녹취록은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학술토론회를 현장 녹음하여 그 결과물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발언자의 동의와 허락없는 인용 및 전제를 금하며,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 및 수정을 절대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부 토론 주제 1. 한국 민주주의 진단: 종합토론 70분 (15:00~16:10)

☞ 권수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아니면 여성들의 문제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혁재: 자,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숙 연구원님.

☞ 최종숙: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최종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토론자를 소개할 때, 저를 빼놓고 하셔서 제가 셀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파트의 토론자인데요. 그런데, 앞의 분들 주제 중에서 '여성' 관련 주제가 많은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 다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권수현 선생님 주제의 리스트를 보면, '점수'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순위'는 하락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우리나라는 여성대통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성대통령이고. 사실 뭐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땐 어쨌든 상당한 여권신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러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랑 지금 연관시켜서 요즘 '강남 여성살해사건'이 있었고, '여성혐오'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성혐오가 왜 등장하는가,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신장'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살해를 했던 그 분도 사실은 '남성 루저'.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생각할 때 여성과의 어떤 일자리 경쟁에서 자신들이 도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혐오로, (여성이) 약자는 약자이지만 자기가 더 약자인데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어쨌든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자기의 일자리를 잠식해가는, 이런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혐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모순적이잖아요. 분명히 여권은 신장을 하고 있고. 물론, 반박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구요. 그래서 이제 혐오는 이런 현실과 동시진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강남의, 그런 여성혐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여성이어서 밤길을 걷기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이런 것을 제가 공유하지만, 그 타겟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물론 그 살인자 그 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성혐오도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랄까, 이게 '맞는 경향'인지 되게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밉고. 지금 여기 남성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대상'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지. 이런 학자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까 가부장제 말씀을 하셨는데, 가부장제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녀 젠더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일단 많이 부각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생각 중인데, 여러 선생님께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한번 제기를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 모춘흥: 한양대학교의 평화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모춘흥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주로 딱딱한 북한 연구입니다. 북한의 위기상황, 수령, 김정은 등 어떤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여기에 썼을 때는 약간 발언이 주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이 민주주의라는 자체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제도적 민주주의' 등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갈등과 대립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오늘 토론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에 관록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어떤 담론을, 모든 이론이라든지 등을 잘 알고 관심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실은, 제가 민주주의 담론에 대해 참여하신 학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고상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는 중간쯤에 어떤 한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래에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관심이 뭐냐?" 그 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와 제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국회에 계시는 의원 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같이 남녀를 떠나서 다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죠,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망정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을 보호해 줄 사회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저희가 사실 '세월호' 이후의 국가, '세월호' 이후에 논의해야 할 국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에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 사회',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이슈보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과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시하자는 것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슈 중에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한된 어떤 사

회적 가치를 줄속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여-야, 다양한 진보-보수층 간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앞서 말씀해주신 '통합진보당 해산사태' 등에 대해서도 극명히 정치권이나 국민들 자체가 국론이 갈리고, 국민 중에 분명 찬성하는 분도 있는 점을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걸 당연한 이슈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지금 이슈적으로 가장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와 같이 삶과 생존에 결부된 민주주의를 담론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 권수현: 최종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겟(target)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상 여성, 젠더,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논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면, 한국 남성과 대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우위에 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페미니스트나 여성주의적 렌즈로 사회를 본다는 것은, 이 사회가 여성과 남성, 또는 어떤 '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계급적인 시각이 있듯이, 젠더라는 렌즈로 볼 때는 계급이라는 렌즈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하는가는 적절치 않고, 제도 또는 구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혁재: 임미리 박사님, 잠깐만요. 그 전에, 이 청중 중에 영남대학교 우승연 님 와 계십니다. 네, 저 분이 청년과 여성으로서, 여성공동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임미리 박사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 청중 1 (영남대학교 우승연)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사범대 특수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우승연이라고 합니다. 영남대학교 재수해서요, 지금 매일 큰 방학을 하고 여행 중에 페이스북에서 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여성혐오 문제와 통일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이지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이런 여성학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주신 권수현 선생님, 그 의견을 듣고 있는 동안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

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전혀 다른 의견, 이야기를 드리면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라, 그 여성혐오라는 것도 '혐오'가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되게 낮은 계급, 낮게 이렇게 차별 받는 것이 여성혐오고, 이게 지금 강남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그 때만 바로 여성혐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저도 1시나 2시까지 친구랑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앞에 남성분들은 여성들은 그냥 조심하라면서 남성들은 그냥 지나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타깃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사건이고 이렇게 살인과 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살인사건이 여성혐오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여성 대표님들이 말할 때 남성분들의 그 태도나 그런 정말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도 여성혐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혐오'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혐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누구, 누가, 남성이 지금 우월 된, 남성우월상태에서 여성이 혐오, 여성이 차별 받는 것이 여성혐오지, 여성은 근본적으로 지금 남성주의가 된 상태에서는 남성을 혐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여성을 혐오하고 저 또한 예전에 많은 이런 가부장적 제도와 그리고 이제 여자 그것들, 저는 '체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초'에서 여성의 그런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도 알고 또 그 여성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좁은 사회지만 서도 깊게 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의견을 내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그리고 청중 분들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혁재: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저에게 몇 장의 제의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작가회의' 회원이신 소설가 윤영전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 정치는 한 세대, 30년 안에 변화가 가능 하다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이관후 선생님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토론 중에.

여기서 이제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최병현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청중: 제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의 제기는 뭐냐 하면, 이 '세월호 문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우리가 (토론) 하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나 여기와 관련돼서 또 1부가 아니면 또 2부 발표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질문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역시 청중 분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수구 헤게모니의 일방적이고 탐욕적인 폭력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와 왜곡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뭐 선거라든지, 제도, 교육,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이것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될 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토론 과정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게 아니면, 제가 있다 쉬는

시간에 박창식 실장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답하실 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라: 네. 임미리입니다. 그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여성혐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예로부터 여성차별, 그러니까 성차별은 분명하게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성차별과, 현재의 '여성혐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대학 때, 담배 피우다가 맞아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고,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야밤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가다가 칼 맞을 뻔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여성혐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같이 싸잡아서 여성혐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전의 여성차별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여성혐오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성차별이 아니라, 여성혐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차이'를 '차별'로 만들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혐오라는 것은 보통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애인 혐오라든지 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 혐오. 이런 혐오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차이를 차별로 만들면서 차이 자체가 혐오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와,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로 본다는 것은 '연쇄적인 차별'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에 대한 차별은 그 이질적인 것에 대한 하나로 끝나지만, 지금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그 차이를, 연쇄적인 것에 대한 차이를 차별로 보면서 그 차별이 계속적으로 연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성사회에서 소위 '루저'라는 말도 등장하고, 그 때 '루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전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차별, 차별의 대상으로 이야기된 사람들. 그런데 그 차이가, 차이를 차별로 만들면서 연쇄적인 차별이 일어나는 속에 성적 차이조차도 이전의 단순한 차이, 가부장제에 의한 차이와 다르게 '혐오'라는 좀 더 강력한, 감성적인, 배타적인 그러한 감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혐오'라는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권수현 선생님이 정치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성차별이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성 스스로가 그런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껏 노력해왔나?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관여하고 차지했던 그 지위를 여성이 가져오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권에서 여성정치인의 수를 따진다는 것은 남성이 절대 다수로 가져갔던 자리에 여성의 자리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확보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필시 거기에서 탈락된 그 남성이나 등등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반면에 여성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성의 영역가치를 넓힌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정치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다면, 현재 여성 정치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의 영역을 제대로 대표했느냐, 그러니까 여성노동자를 대표했느냐, 소수 여성들을 대표했느냐 그리고 여성이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고아원이나 어린이 수용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달라고 십 수년 넘게 싸웠는데도 매년 상정도 못된 채로 계속해서 의회가, 회기가 해산되고 이런 일이 십 수년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런데 대한, 그런 수용소에 대한 수사권, 조사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거의 한 20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임기는 300회 넘게 계속해서 부결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완화된 식으로 설명이 된 줄 아는데..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렇습니다.

☞ 최동철: 네, 최동철입니다. 네, 우리 그 최종숙 선생님께서 아까 그 강남역 살인사건이랄 지, 또는 이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칠곡계모나 유모학대 사 건들은 개인적인, 여성편하에 의해서라기보다 이것은 사회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라고 보는 관건을 따지자면은, 이 사회자체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느낀, 그 문제가 뭐냐 면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살이 심하고 여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사고의 큰 틀로 봤을 때, 이것은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시절의 미국의 사회현상과 같은 Bowling Alone의 저자인, '로버트 퍼트남'이 우리사회의 공동체는 소멸하고 개인주의는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적 자본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우리 사회변화 현상을, 우리 교육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자살이랄 지 공동체의 붕괴랄 지 이런 현상이 지금, 이 현상을 바로 시스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철: 네, 김재철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토론 자체가 '성적대결'로 조금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남성이 진짜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청중웃음) 여성혐오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기회는 지금 이 21세기에는 이제 동등하게 조건은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조직이나 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 '돈' 또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경쟁관계에 있는데 그 경쟁관계에서 남성이 약간 유리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남성이 우월하고, 그리고 여성혐오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매스미디어들이 만들었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동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주로 여성들이 살인을 많이 당한 그 사건에서 한국 매스미디어 첫 반응이 '여성혐오' 입니다. 과거를 보면. 그래서, 그게 진짜 여성혐오인지? 저 같

은 경우가 이제 여기 다른, 계신 남성분들은 여성혐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부 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로 되어서 남성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서서히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그걸 무서워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심리적인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저는 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이 우월감으로 여성을 혐오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왜 남성한테 '루저'라는 말을 쓰고. 돈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지,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혁재: 잠깐만요, 김대표님의 주제가 젠더 문제입니까? 다른 얘기라. 사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한국 정세에서 제도화된 남성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발표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 우리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정치를 넘어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렇게 일반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마치 김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그런 가치관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비춰지는 것 같아서. 또 이걸 길게 하다 보면 다른 주제들이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뭐 요 정도에서 젠더 주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우: 북한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통일의 별' 박현우라고 합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남성이 선택의 주체라든지, 타도의 대상.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해주어야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북한에서 역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 때 우리의 역사는 간략하게 제가 여기 메시지를 만들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었고 또 산업화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민주화를 쟁취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다음에 친구들이 또 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항상 했던 게 우리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물어보는데, 우리의 민주화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1960년,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을 주도한 4.19혁명, 1980년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면서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민주화운동,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월 민주항쟁.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완의 광복'을 '새로운 통일의 역사'로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점들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북한 체제는 왜 저항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저 스스로 되게 부끄럽게 질문했던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지금 당사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도 가장 늦게 통과시킨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인권수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앞에다가 북한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들어 갔을 뿐인데 갑자기

기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항쟁 29주년 학술토론회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말할 때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적 절차 또 과정, 정권의 잘하고 못했던 점,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 등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함께 좀 포함시켜서 이게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좀더 성숙시키고 논의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빈: 네, 저는 아까, 아 죄송해요. 박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박현우 선생님 (발표와) 상관없이, 아까 권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경제포럼 지금 6쪽에 보면은 그거를 지표로 보여주셨어요.

이 세계경제포럼 젠더 지지, 아니 정확히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지수 거든요. 그런데, 그 성평등 지수는 격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가 있습니다. UNDP도 3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그걸 봤는데 이 격차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보는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보는 경우엔 지금 한국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UNDP에서 보는 GII라고, 성평등지수가 있습니다. 성불평등지수가 있는데, Gender Inequality Index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보면 한국은 15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성취 수준을 봤을 때, 전세계에서 15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는 격차는 차이가 나지만, 여성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 그러니까 성취 정도에 따라서는 아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혐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현재 남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위협하고 있고, 기득권을 여성으로 가져오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서 일어난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쳐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토론이나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데 혐오라는 말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기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왜 우리가, 저는 정말 여성혐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남성들을 찌질한, 소위 그런 남성들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지금 화를 간접적으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성도 지금 성취수준이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세계 15위이고 다른 성범주 지수 수준에서 이제 절대적 성취도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남: 네, 광주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로 있는 유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박사라고 하셨는데(웃음), 아직 박사라고는 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처음에 학술대회에 토론을 지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부와 2부를 어떻게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공론장의 불평등, 젠더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법리적 불평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합리라고 해야 할까요? 뭐, 선출의 불평등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 가지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그럴 경우에 이러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불평등이나 불합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그러한 불합리나 불평등으로 기인한 상호간의 차이를, 차이나 차별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상호간의 관계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일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로써 이러한 불평등이나 불합리를 해결하거나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인민의 권력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권력을 이양 받은 국가, 지금 그에 관해서, '통치기구' 잼아요? 이 통치적인 국가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자체를 좀, 철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다른 방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 개념을 설정하거나, 실천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네.

☞ 김지원: 네, 여성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가진 강점 같은 거, 제가 젠더, 여성이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점도 있고. 아, 최근에 뭐 강남역 살인사건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교인한테 위협을 해서 여신도한테 간음을 하기도 하고, 아동폭력으로도 지금 많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성-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 장애인, 아동, 어찌 보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여성은 힘이 좀 약하니까,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쉽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은 오늘 제가 경제 파트를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많이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핏 떠올랐던 거는 이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존 롤즈의 '정의론'이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국에서 널리 읽혀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롤즈의 정의론에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장 효용이 적은, 가장 고통 받는 자의 행복을 극대화 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전에 글 같습니다. 이제 사회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겠지요. 그 절차를 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슈에 반색하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저는 세월호 사건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조치라든지 사전점검을 하지 않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점검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어나서 돌발했던 사건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이런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면,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문제가 될 터인데,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미국식의 어떤 좋지 않은 제도를 확정적으로 도입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이면에는 어떤 정권의, 이번 정권 내에 무언가를 가져오고자 하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이지만 실은 제가 장애인행정과, 저희 학교는 이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저의 제자가 청각장애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중에 그런 게 있었더군요. '청각장애 40데시벨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별표-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가 담당자에게 오신 거예요. 장애인행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9급공무원(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실었는데, 기껏 공부를 했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신체검사를 통과를 못하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학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일부에서 조금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일부 장애단체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런 법령에 대한 것들도 변화를 하고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이관후: 네, 저는 잠깐 말씀 드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더를 가지고, 젠더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한참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9년 전에 젠더는 한국의 이슈가 아니었죠. 민주주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29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지금 이제 한국민주주의를 말하자고 해서 패널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성,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젠더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죠.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지만 사실은 여성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과거의 한 100년 정도 역사를 살펴보면 인종, 민족, 그 다음에 노동자-산업혁명 때 노동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런 데 대한, 이제 이게 어떤 게 가장 잘 드러나느냐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차별될 수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나요. 차별해버리면 되거든요.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어

린 아이라고 차별하고 차별해버리면 되요. 조선인이라고 차별해버리면 되요. 혐오할 거는, 혐오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혐오가 드러나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이 나보다 못한 존재,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건 정말 싫은데,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민주주의의 원칙이 평등이니까. 그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여성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요즘에 애들도 이제 많이 때려죽이는데, 어른들이.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애 비위를 맞춰져야 되고, 장애인 기타 등등 소수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차별할 수가 없으니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나하고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혐오'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아주 오래된 근대의 역사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공식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더 이상 불가능해진 어떤 임계점에 오면, 그것이 혐오라는 수단,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든 생각은, 국가가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면, 흑인에게 똑같은 법적인 지위가 주어진 게 60년대인데 60년대 이후에 여전히 흑인들이 혐오 받죠. 혐오의 대상이 되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세월호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아니 국가가 방관하거나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강자의 지위를 부리면서. 이런 어떤,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혐오사건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와서 이런 민주주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어떤 사람들을 포용할 것이며 소수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여성이 죽었지만 얼마 뒤에는 노인을 각목으로 때렸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애들의 경우에는 이미 맞아 죽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논쟁이, 오늘 논쟁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논쟁을 했고, 학계에 따라 논쟁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말 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성국회의원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하는데, 국회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사건이냐 아니냐, 경찰청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예를 들지 않은 거죠.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같이 모여가지고 올해 예산안에 한 10억정도 추경해서 우리 사회에 과연 여성혐오는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백서를 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1년, 2년을 들여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여성혐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혐오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

런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성 대표들을 뽑았는데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사건이나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성대표성'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이제 '정치가 한 세대 안에..' 허허 (웃음) '왜 이러느냐' 하는데, 저는 뭐 우리가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도 아마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이 생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경제도 뒤탈이 나죠. 이렇게 급격하게 쌓아 올리면, 쌓아 올려서 경제도 뒤탈이 났고 나중에 그것을 수습해야 되듯듯이. 어느 정도 급속한 민주주의, 민주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속한 사안이 있듯이. 북한 민주화도 어느 정도는, 당장 독재치하라고 했을 때는 당장 민주화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저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속도가 있는 거죠.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부터의 그러니까, 87년 이전의 한 세대, 그리고 87년 이후의 한 세대가 되었죠. 아마 2017년부터의 한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는 훨씬 더 점진적이고 느리면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제도 만능주의'로 빠지지 말고 정치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제도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떤 정치문화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아마 진전이 될 때.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제도, 선거제도이든 헌법이든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장 국민들한테 맞으려면 저는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 세대의 의미가 있다 하면,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투표제도가 한 세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 제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우리가 다음의 민주주의, 2017년부터 해야 될 민주주의는 아마 또 다른 세대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손혁재: 네. 김현진 연구원님이 아까 발표를 하고, 토론은 안 하셨죠? 그 전에 제가 (청중 분의) 문제제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제가, 긴 용건이라서 해야 할 내용은 아닌데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종하씨 되시죠? 자, 이 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는 이 토론이 근원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원인을(??-잘 들리지 않음)논의한, 객관적 이행(?? 잘 들리지 않음), 법과 제도의 부실함, 강요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념적이고, 근본적이지 않다, '한 시대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물질적인 면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것 하고 통진당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통진당을 해산시킨 법과 제도가 부당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단순 절대대성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보수적인 힘 때문이고 대표자가 동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대표가 개인의 그, 그 대표자 개인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물질적 힘과 배경이 동의안을 이행할 당위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가 헌법재판관, 대통령, 국회의원 개인들의 문제라면, 당인의 문제라면, 개인의 대체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게 직접 김현진 선생님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것과 같이 이야기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김현진: 저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관후 연구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면을 한마디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여성정치인들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뭐 백서를 내면서 예산을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문제가 반드시 여성한테만 속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특히, 지금 민주주의, 사실 저는 이 토론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선거, 제도, 대표 이런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젠더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젠더 문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인 여성이지만 사실 젠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제가 몸소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나 그 답이 딱히 잘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약간 외면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 여성문제가 반드시 여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여성인 교수님들은 그 분의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여성연구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성 문제, 아니면 젠더 문제, 아니면 남녀차별 문제와, 조금 알게 모르게 생활화 되어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셨던 이제 뭐 근래의 큰 문제에 대한 질문(청중 박종하씨 질문)을 하셨는데, 글썄(웃음), 뭐, 워낙 지금 그 질문의 요점이..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분들, 선생님들이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구별’과 ‘차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EBS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끊임없는 어떤 구별과 차별, 구별 짓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외고나 과학고나 하여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거기에 자기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구분 짓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때, ‘정시’와 ‘수시’로 나뉘어서 그 능력을 서로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그 구분 짓기를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만연 되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현상학적인 얘기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제도든, 아니면 문화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손혁재: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발표하신 분, 처음에 토론하신 분 가운데 박송연 선생님만 토론의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까 몇 가지 지표를 들면서 ‘한국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김

지원 선생님께서 사회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었다고 하지만, 예시도 없고 본인도 그다지 시도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이라든가 또는 이 재벌개혁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박송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송연: 선생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김지원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라는.. 아. 저는 계속 지금 그 다른 분들, 이 토론과정을 따라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고.. 요 부분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어차피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번에는 그 제가 계속 생각했던 얘기를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지금 얘기가 겹칠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려고 있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이관후 선생님이 진단한 부분. 그.. 그러니까 '혐오', 여성혐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부분하고 저랑, 이렇게, 그 제가 메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하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론은 또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혐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는 이관후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부문 내지는 뭐 '소수'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그러니까 특별한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사회진화론'적인 관점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합니다.

역사성의 얘기도 아까 이관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자가 빈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혐오하는 이런 관념들, 그리고 또 인종적인 그런 관념들, 흑인은 열등하다든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 토마스 제퍼슨 역시도 노예 같은 경우에 5분의 3만 인간으로 인정을 해서 투표권을, 연방헌법을 기초할 때 그렇게 기초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관념들. 또 남성이 공식적인 어떤 그 이 사회공식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문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총괄을 해 오면서 여성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로 제도화시키고 또 그것을 같이 전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왔던, 이런 일종의 가치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시 또 노인에 대한, 요즘 또 '노인혐오'에 관한 담론들도 굉장히 또 많이, 아까 이관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해서 손쉽게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는 '지역주의'이고, 또 하나는 '세대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요번 그 박근혜 정부 이후, 언론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담론을 굉장히 많이 쏟아 내는데 뭐 '노인들이 젊은이의 기회를 망친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만의 그 특정현상은 아니죠. 이번에 그 브렉시트에 관해서, 또 그 투표결과를 가지고 영국에서도 세대갈등 담론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만의, 또 그러니까 갑자기 드러난 현재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여성만의 어떤 특정한 부분도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게 보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뭐 '차이를

차별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 아니 진단 자체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본래 차별이었던 게 맞고요, 그게 차별이었던 게 현실이고, 그 현상이었고, 역사적인 거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그 차별을, 차별구조를 '차이'로 볼 것인지, 단순한 '구별'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보편적인 그 인권의 관점 내지는 민주주의의 과정의 관점에 있어서의 지향해 왔던 가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 문제 역시도 보편성의 관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본래의 그런 보편주의 관점에 대한 좀 재사유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모춘흥: 네. 저는 이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과 (그에) 앞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시할 제 답변을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 여성혐오사건이나 이 세월호 사건이 매우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언론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이 여성혐오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걸로 진화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이 여성 혐오사건이라고 여태까지 과대포장하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안산에서 일을 한 높은 직위에 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 국가 공권력이, 국가의 어떤 무능함도 있지만 언론의 역할이 꼭 이래야만 했나,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모두 아파했어요. 언론도 다들 아파했죠. 그런데, 그건 그 순간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유병언 잡는다, 사실 YTN, 연합뉴스, 각 종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유병언을 검찰이 수사한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갖고 있었던 근본원인,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유병언 잡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원인 규명과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자체도 아직까지 여성혐오라고 진단이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이 여성혐오로 아예 도배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의 '마케팅'인 거죠.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 문제는 당연히 제도권 정치에서는 분명히 그 진단 자체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도 선거에 당선되어야지만 개정(?)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이 어떤 국민과 이 제도권 정치의 간극을 키우는 언론의 불필요한 행위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관후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앞에서 말씀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사업의 이제 기본 어젠다라든지, 그런 연구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6년동안 살아본 유럽과 동아시아의 차이를 차이와 구분 문화로 얘기했는데요, 최근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차이 중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고 있나,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두는 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입니다.

☞ 권수현: 네, 여성/젠더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김재철 선생님의 반응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남성들이 여성혐오나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안 그런데', '나는 여성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라는 남성들의 이런 반응 자체가 여성들의 문제제기,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계속 말씀 드렸지만, 남성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성들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반응하는 것들이 저는 ... '여성'들은, 대학생 때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나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 여성이 약간 뒤로 물러서거나 이러면, '오빠는 안 그래', '오빠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 한 두 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다른 남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발끈합니다.

노동자나 이주민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니면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여성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대책들만 봐도 여성들한테 밤길 걷지 말고, 치마 짧게 입지 말고, 호신술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남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은 하지 않는지, 왜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미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동안 여성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이관후 선생님께서도 여성대표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그 수는 남성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소수로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진입했던 여성들이 여성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나 라고 한다면, 여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고,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국회에 들어왔던 여성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성들이 국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여성들한테 너희들은 뭐를 했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70년 동안 국회를 움직이고 있던 남성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의원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는데, 여성의원들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는 여성들만이 꼭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의원들 중에도 여성권리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혁재: 자, 이제 젠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중단시키는 분위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하여간 이런 차이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혐오가 일어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남성들은 개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왜 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사회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많은 남성들이 접근할 때는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별적인 남성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그런 데에서 벌어진 차이가 아닌가, 그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아가지고요. 얘기를 더 하게 되면, 다른 얘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 김재철 대표님의 답변은, 2부에서 또 종합토론이 있으니까 그 때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현진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한, 법과 제도의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제문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가지고 보는, 그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갖다가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의 하나의 원자로서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민주주의가 제도 민주주의 완성이 된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적인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김현진 선생님은 뭐, 사법부의, 개인 문제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음) 사법의 지나친 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권력 비례의 원리를 갖다가 그것을 균열시켜 버린 다든지, 아니면 정당정치의 다양성을 훼손시킨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 마치 그것이 헌법재판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박종하 님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자리(? 잘 안 들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진단을 내려보고 개별적인 분야에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이 여섯 개의 주제가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시간을 짧게 제가 드리고 눈만 마주치고, 기회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서 이렇게 뒤의 결과가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합시다.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은 진단시간이고, 2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1부에서 했다면, 2부에서는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답이 안 나온 이야기는 2부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1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2. 한국 민주주의 미래: 지정토론 녹취록

본 녹취록은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학술토론회를 현장 녹음하여 그 결과물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발언자의 동의와 허락없는 인용 및 전제를 금하며,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 및 수정을 절대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부 토론 주제 2. 한국 민주주의 미래: 지정토론 30분 (16:20~16:50)

☞ 박창식: 네, 그럼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라는 것은 주로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 기사를 하고, 논설위원을 하고, 정치부장을 하고, 정치분야를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자 하면서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해서 저는 언론학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학위를 해서 가능하면 주로 야간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관심분야는 언론과 소통이나 정치커뮤니케이션, 여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사회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방대한(웃음). 사실, 기자가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리가 전부입니다. 논문을 쓰거나, 칼럼을 쓰고 해봤지만 본인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발표하는 것보다는 정리와 순환이 전문분야인데 굉장히 방대하고 해서 막막한 생각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소정의 기획한대로 여섯 개 모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대로 꼭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종합토론에서 자유롭게 접근을 하는데 어떤 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1부에서 우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현 단계를 진단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평화와 통일문제까지.

2부에서는 '미래'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1부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틀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틀이란 것을 잘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하시는 분야가 모두 다릅니다. 다른데, 정치를 전공하시기도 하고 사회복지, 경제도 계시고, 법제, 평화와 통일 분야도 계시고 한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30년 뒤의 여성과 젠더 문제와 관련한 세대, 20년 뒤, 30년 뒤의 한국사회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령, 권수현 박사님께서서는 세대와 젠더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20년 뒤, 30년 뒤 한국사회의 세대와 젠더 문제는 어떨 것인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나빠질 것인가. 그리고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아질 것이라라고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20년, 30년 뒤에. 그럼, 그것을 촉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 틀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면 각자의 영역, 우리 박현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일운동에 관계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분야에서 20년, 30년 뒤에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 악화할 것이냐, 개선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틀을 염두에 두시고 소정의, 그 준비해주신 각자의 발제를 이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휴식시간에 우리 권수현 박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

로 3,40대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이 토론회를 기획한 까닭이 있는데 그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인권 이슈의 어떤 후퇴가 있지요. 정치적 민주주의, 또 실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경제·사회적 격차의 심화라든지 양극화,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타난 것은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하는, 세대간 격차가 깊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삼중모순'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오늘날 민주주의 상황을 생각해보는데, 그 중에서 세대간 격차의 문제, 세대의 지체문제, 뭔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발제문을 읽어보니까 세대와 젠더의 대표성 문제를 권(수현)박사님 발제문에 그게 잘 정리되어 있던데.. 정작, 지금 '강남역..' (청중웃음) 그런 와중에 의미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그 부분을 요약해서 화두만 좀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2부 토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박사님께 첫 번째 부탁 드릴게요.

☞ 권수현: 감사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치르면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남녀별 20대 총선을 평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1명이라는 여성이 당선이 되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17%로 19대보다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았지만 총선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는 거의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관후 선생님께서 이제는 대표성에 있어서 좋은 대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임 미리 선생님께서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고 정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고 반드시 좋은 대표라고 할 수 없으며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성후보들 중에 남성보다 훨씬 더 자질이 안 되는 여성들이 후보로 공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지 않는 여성의원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다양합니다. 여성들을 어떤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양한 여성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특히 남성기득권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후보로 올리고, 그런 여성들이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세대입니다, 19대에는 20-30대 국회의원이 9명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당들이 청년 세대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30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2명, 지역구 1명으로 1%입니다. 3명 중에서도 2명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입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1명은 40대가 되기 때문에 20-30대 의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세대 구성을 봤을 때 분명히 20-30대 집단이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2-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적인 특징을 보면, 50대 이상, 대학원 졸업, 평균 41억의 재산을 가진 남성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은 현재 20-30대 사람들

인데,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청년들이 왜 고령화된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말했듯이, 한국정치에서도 20-30대는 배제되어 있고 50-60대가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여성과 청년세대가 만나서 현재의 과대 대표되고 있는 남성 중심의 노령화된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표자 1. 김재철 “슈퍼리더가 필요한 대한민국”

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수현 선생님이 한 얘기에, 얘기를 더하고 싶은데 일단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해 온 것을 먼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갓 30대가 된 청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 중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명 정도인지 다들 아십니까? 1,000명 중에 7.4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0.7%라는 건데, 거기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괜히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저는 이제 리더십이랑 전략부분으로 일단 나뉘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과는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폭이 넓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로는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정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하러 다녔습니다.

특히 조직진단이나 조직 서칭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전에 김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컨설팅을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을 주고서 많이 하는데, 다들 기관의 장, 사장님들 차를 보면, 다들 그 차를 1호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3000CC 이상급, 그랜저 이상급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데는 에쿠스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말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권력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고.

대체로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도 행시를 도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러니까 권력거리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일반서민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사를 대동하고 에쿠스를 탄다거나, 기사를 제공하는 차를 탄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나라 실정과와는 반대로 얼마 전 KBS에서 덴마크나 스웨덴 국회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는 권력거리가 정말 좁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이거나 장관들이 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차도 경차나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신뢰를 갖게 되고. 또 소통을 자주 하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비서도 불과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이 되어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의원 1명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인턴을 포함시키면.

그런, 이제 말 그대로 300개의 소기업들을 지속(?)하게 돼 있으니까, 권력거리가 자연스레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거리가 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2012년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대한민국에 리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 과연 대통령이 있는가?', 또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제시한,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만, 저의 이제 경영학 측면에서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 밑에 있는 팔로워들을 이제 리더로 만드는, '셀프 리더'로 만드는 게 슈퍼 리더십인데 본인의 관료들이라든가 전국민이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좀 더 밝은, 긍정적인 정치 이상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슈퍼 리더에 대해, 슈퍼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슈퍼 리더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일단 전제조건이, 보통 리더십에 대해 얘기하면 리더가 필요하다고 팔로워가 그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팔로워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 스스로가 리더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진정한 일 잘하는 대통령 또는 국가의 리더로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표자 2. 모춘홍 “통일시대를 짊어질 청년세대”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정치학, 이 북한학을 연구하고 강연하는 모춘홍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로서는 북한이라는 존재, 통일, 남북관계는 어찌 보면 매우 엄중한 현실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 학문적으로 재미있는 대상이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엄중한, 이 갈등이 있는 남북관계를 연구하면서 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저의 위치, 처지에서 2016년도의 남북관계는 매우 엄중한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개성공단 폐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흔히 '남남갈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이 절반으로 나뉜 것 같아요. '개성공단 폐쇄'의 찬반에 의해 절반으로 나뉘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3년동안 여기에 매우 큰 공을 들였고, 거의 실제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북한의 어떤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양상에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카운터 파트너인 북한(?)이라는 게 있는데 반해, 우리 스스로의 어떤 통일에 대한 내적 역량을 기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통일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특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대학생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여자 분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통일부에서 후원을 해서 각 대학별로 통일·북한 강좌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대학의 통일교육이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할 지, 대부분 다 이제 '통일'을 너무 딱딱하게만 했다, 혹은 옴니버스나 교양강좌에서는 정부나 지

자체, 혹은 민간사설기구에서 통일이나 남북관계 전문가가 잠시 와서 그냥 '정부정책은 이래서 옳다, 좋다,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교육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통일·남북한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통일 비용은 내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학생들에게, 사실 저도 사업기획서 쓰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제가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통일교육 강좌가 열리면, 어떤 강좌가 열렸으면 좋겠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교육이나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독일통일을 거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열 몇 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독일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두 번째, 독일통일 보다는 이 시대 젊은 학생에게는 통일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통일이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는지, '통일의 선물'. 그리고 20대 젊은 학생들의 위치에서, 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는데 어떠한 나의 선물을 받아올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저의 글을 담아 왔지만 저 역시도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싶은데, 학생들이 필요한 통일 혹은 북한이란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은 (지금) 정부에서든 차기정부에서든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내세울 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떠한 지향점이 필요한 건지, 혹은 왜 그 동안에 이 통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제가 답변을 갖고 오기 보다는 뒤에 있는 20대 젊은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표자 3. 박현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

20년 후의 저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나 주게 될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권의 후퇴, 소위 양극화, 불평등,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를 포함한 갈등의 분열 축들이 우리 사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의 혐오가 될 수가 있고 불평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수 없는, 마치 가스가 꽉 찬 곳, 언제든지 라이터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또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전까지는 통일이라는 '담론'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공론화 할 수도 없었고요. 좋았던 점은, '통일대박론', 실체는 없지만 통일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건 분명히 순기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 준비나 노력들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통일경제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

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혼 못한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엄마, 내가 이렇게 혼자 지내 봤는데, 외로워서 술 먹고 돈 쓰고 다니고 흥청망청 하는 비용보다 내가 어떤 여 변호사(?)랑 결혼을 해서 마음의 안정성을 찾는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을 해보니, 그게 혼자 있었을 때 흥청망청 쓰는 비용보다 더 나은 거다”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맞겠죠. “여자친구도 없는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게 제가 얘기한 ‘통일경제론’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거는 가혼이 필요하고, 서로의 어떤 가치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혼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게 또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통일헌법’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 드렸던 이유는, 너무 겉돌고 우리의 눈높이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정말 횡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과 우리는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해 가야 될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모순을 지금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또 밀려나는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째로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이제 횡행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기록. 그거는 아까, 인권은 사실 보편 타당한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1주년을 맞은 UN인권헌장사무소를 비롯해서 ‘북한인권법’ 이걸 토대로 이제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9월 1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인권기록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바로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 때 그 때마다 일종의 ‘위원회’를 마련해서 과거사 청산의 노력을 해 왔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러한 실패한 경험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소모적인 또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바른 기록을 토대로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속에서의 과거사 청산을 한번 심각하게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행기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의와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남북한의 ‘합의’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청산 이후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문제.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록’과 ‘과거사 청산’, ‘이행기 정의’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이라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관통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프레임의 접근으로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우리가 오늘 지금 29주년을 맞은 6월항쟁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가 새로운 ‘통일의 시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자 4. 유경남 “봉기의 가능성”

네. 토론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준비했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학자로서.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판했던 ‘한국민주화운동사’를 보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같이 있는 오늘날에 동시대인이면서 민주화 운동의 밖에 있던 이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의 어떤 전달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 왜냐 하면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정당한 기억의 공동체를 확산해가는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가 확대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과거 민주화운동의 목표와 과정들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민주주의의 어떤 실천과제로서 잘 논의되지 않는 것들이, 기존에 실천했던 어떤 ‘봉기’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봉기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사건이자, 전환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잘 알다시피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이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지향들을 하나로 합쳐주었다면, 특수한 계기나 어떤 대립 점에 일어났던 인민들의 봉기는 현실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굉장히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봉기’는 폭력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은 논의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인상이 있지 않나 라고 되돌아봐 지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한국사 전반에 걸쳐서, 과거 역사시대에 인민의 봉기는 꾸준히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모색되었고, 준비되었고, 실천되었습니다. 특히 5.18항쟁 같은 경우에는 ‘무장봉기’가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현재적 관계에서 과거에는 어떤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봉기’가 선택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제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인민들은 정당하게 봉기를 선택할 순 없을까? 며칠 전에, 이제 ‘민중총궐기’ 때문에 한상균이 10년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봉기라는 방법도 한 가지, 민주주의가 인민의 정당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표출해내고,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켰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적인 권력이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국민은 과연 그 다음 4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것의 하나로서 ‘봉기’는, 저는 이제 순하게 표현하면 ‘저항권’,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표를 주고 산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받아야 되지 않나, 환불 받는 제도가 절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또는 강하게 그게 시민들의 뜻으로 6월항쟁처럼 다시 한번 실천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30년 후의 한국사회가 제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관계로 갈 수 있을까, 혐오라는 단어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그만큼 시민들의 인식들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 체제에 대한 인식들을 자기로부터 끌어내면서 현실사회의 ‘부

정성'들을 발견해 내고, 이 부정성에 대한 해결책들이 이 사회 내에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이탈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어떤 과거의 혁명의 개요를 보면 이탈 다음에 오는 게 봉기거든요. 이제 역사학자로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일련의 봉기가 어느 방식으로든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봉기의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나빠진다면 그 봉기가 실패가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혁명들은 당시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4.19도 그렇고요, 5.18도 그렇고. 불완전한 결과가 되었죠.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일정 정도의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모아진다면 일정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일정 정도의 결합이 잘 되겠지만, 반대로 그게 더 나빠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예컨대, 수구세력이나 보수세력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아직도 분단의 어떤 논리라 할 지.

뭐, 좋아진다면 이 봉기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시도나 시초들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봉기의 역사를 보면 봉기 이전 단계는 상호간의 연대와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앞선 주제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차이와 차별에 대한 논의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획득했는데, 이 다양성이 배태하고 있는 차이를 제대로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사실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대에는 연대가 되고, 그 다음 대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제2의 6월항쟁, 혁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표자 5. 임미리 “한국 민주주의 과제-적대에서 공감으로, 전선에서 연대로”

네 오늘 발표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발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하고 가장 흡사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28페이지의 한국민주주의의 진단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고, 그 다음 50페이지의 발표는 꼭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소위 선거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51 대 49의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는 현재 한국 정치는 51 대 49로 승패가 갈라지는 다수결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사회를 '혐오의 연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51대 49의 정치에서 승자는 51의 승리를 살인면허까지도 포함한 백지수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51대 49의 정치에서 패자는 49의 패배를 무능력과 무기력의 변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로 다 바꿔 드리죠, 표를 달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면 그 때가서 하겠다.”

현재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51대 49, 이걸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51 대 49의 대의민주주의가 혐오의 정치로 바뀌게 된 '역사적 근원'과 '향후의 대안'에 대해서 50페이지를 꼭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 적대에서 공감으로, 전선에서 연대로)

“형제복지원 500여 죽음에 눈감은 채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1987년 6월 항쟁은

6·29 선언 이후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 전선에 매몰되면서 7·8·9 노동자대투쟁의 외면하였다. 박종철의 죽음에 분노했으되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1987년은 그 자체로 87체제의 성격이 되었고 그러한 외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는 이분법적 적대 전선을 기반으로 하고 적대는 가치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매몰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방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여야 막론하고 선거 승리를 지상과제로 삼아 전선과 그 전선을 뒷받침하는 적대의 구성에만 골몰하였다. 그 결과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생존권은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사수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최근 유사 이래 최고의 단결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였다. 흡사 기계라는 적 앞에서 한국인 또는 인간 전체가 대동단결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동단결도 기계를 적으로 상정한 그 순간뿐이다. 뒤돌아서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러다이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기계를 개발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선거를 포함해 모든 이분법적 전선도 마찬가지다. 전선에 내걸린 깃발은 전선 이편의 총합이 아니라 전선 안의 이견과 갈등을 미봉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일 뿐이다. 그리고 강요된 전선 안에서 억눌렸던 이견과 갈등은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분파주의자가 아니라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한 소수자와 약자의 다른 이름이다. 세월호 사건의 슬픔에 공감해 모인 사람들을 6·4지방선거의 이분법적 적대전선으로 이끌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비할 데 없는 분노에서 비롯된 노동자 한광호의 자살은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공감은 연대를 낳고 연대는 실천적 고민 속에 본질에 접맥한다. 그러한 공감을 곧바로 실제 없는 적대의 도구로 삼고자 할 때 연대와 실천의 고리는 끊기고 만다. 반면, 본질적 분노에 대한 외면은 연대를 기대하는 약자들의 실천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그 약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대 없이 지지만 기다린 자들은 그것을 계급배반투표라고 부른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배반한 것인가. 정권교체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미명 아래 인권과 생존권 투쟁을 외면하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신한 것은 야당 정치인들이었다. 이분법적 적대에 매몰된 선거 전선은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주변화하고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시빈민 등 주변계급을 과소대표하게 만든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1987년 7·8·9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해 그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투는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대표하는 대안적인 전선 창출에는 실패한 채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월호에 이어 강남역과 구의역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깊은 공감을 적대로 오판해 한쪽 편으로 줄 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감과 적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적대는 공감으로 힘을 얻고 공감은 연대와 실천을 통해 본질적인 적대로 발전한다. 적대가 아닌 공감으로 연대하되 근원적 분노로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전선은 공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연대와 연대가 접합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전선에서 혐오의 민주주의는 화해와 평화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제 적대가 아닌 공감으로, 전선이 아니라 연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깃발아래 전체가 모입니다'가 아니라, 갈갈이 찢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갈이 찢겨진 이해, 갈등, 차별, 억압, 바로 그 장소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표자 6. 최동철: “한국 민주주의 과제 - 미래 전략과 리더십”

네, 최동철입니다. 먼저 30쪽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52쪽의 발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87년 개헌헌법 현행유지에 따른 법과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한국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들은 그들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권의 연장이나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내년이면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그리고 제6공화국을 탄생시킨 현행 헌법의 개정의 시도로 그 당시의 헌법을 개정한 자들의 의도가 주로 정권의 획득을 위한 “전략적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국가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와 달리 지역적 수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지방 정부보다 중앙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국가 형태인 단일국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기능적, 수직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집중되는 점과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우며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구현으로서 책임정치의 실현, 민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정부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승자 독점의 제왕적 대통령 보다는 협의제 민주주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대안으로서 거론되기는 하나 전자로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제에 내장된 속성적 폐해는 치유되기 어려워지며 후자는 권력의 특성상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담하여 국정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 한국적 분단 현실에는 지난한 과제가 되며 정부의 불안정만 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권력을 나눔 대신에 권력 독식을 조장하는 단일 구가가제와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사회, 정치 지도자의 도덕개념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결여 등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만성적인 정치 사회 경제 위기를 조장해 왔다고 본다. 의원 내각제 여러 유형 중에서 정부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건설적 불신임제 등을 도입하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한국에 적용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2공화국 체제 당시 1960년대초의 한국이 후진적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순수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장면 총리의 리더십이 취약하였으며, 의원 내각제 하의 정치 발전을 위하여 집권 민주당은 신. 구파 파벌의 분당을 통해 양당제로의 정립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등 정당 정치의 낮은 제도와 수준을 정비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초의 상황의 은 모형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사회 환경도 다원화, 복잡화되고 지역 세대 계층간의 갈등 등으로 이를 정치에서도 잘 흡수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내각제를 구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건 자료로 참고하고요. 52쪽에 헌법이나 정당정치에 대해서.. 어, 정당의 문제점이, 정작 정당 민주화가 안되었다는 걸 이번 4.13총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당, 이러한 정당 공천이 사실상 하향식 공천, 과거의 상향식 공천이 하향식으로, 민주적 경선을 통했다지만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 혼란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동치는 사회불만, 그리고 정치불만은 그 다당제 구조로 바뀌지 않고, 사실은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가 본인이 느꼈던 그 무서운 행태를, 피해를 봤던 공천과정을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고, 그것에 올인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했다면 상당히 집권당의 대표로서, 지금 우리나라 차기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데, 당시에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는 많은 비호를 받았지만 공천작업을 하면서 그게 다 망가졌다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웠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절차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총선에서 패자가 되었죠. (이하는 50쪽 '미래전략과 리더십'을 읽어 내려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죠. 패배한 쪽은 여론에 두들겨 맞고, 승리한 쪽은 축제 분위기에 빠집니다. 4.13 총선패자인 새누리당은 여론몰이를 맞으며 혹독한 4월을보냈다. 언론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평론가들을 모셔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오만함이 주요 패인이었다고 이구동성 떠들어댔습니다.

총선에 온 정신이 팔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공작만 일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각 당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정당 민주화는 사라지고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물갈이에 나섰고, 그 물갈이는 면접시험까지 등장시켜 생방송으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더 한심한 것은 여당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입니다. 특정 정치인들을 공천탈락 시키기 위해 친박이 비박 의원들의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 그 진위를 둘러싸고 계파싸움 하느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의원들의 품격 없는 모습. 정치 엘리트가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를 할 자격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폴리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통치'라고 정의했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것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치란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를 뽑는 콘테스트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현안들과 맞서 싸워 국민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이끄는 통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실패 공천 파동입니다. 그리고 공천과정 비민주화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치학자 젤리노와 벨랑제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률 1%포인트 증가는 집권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1.3%포인트 감소를 가져오며, 물가상승률 1%포인트 증가는 집권당 득표의 0.4%포인트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추정할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는 공천 과정의 해프닝보다 박근혜 정부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더 잘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임 후 3년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성과도 없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물가상승, 청년실업 등 해운업 구조조정 등 각종 사회문제 살인 사건까지 굶직한 실정으로 좌초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계파싸움에 시간만 날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법과 제도가 확립되고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질서의식 함양되고 성숙되는 것이죠. 이는 국민들을 계몽시키거나 교육을 통해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공공재인 교육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루어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북핵 문제, 노동개혁, 그리고 청년실업까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철학과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여소 야대 협치를 통한 창조하는 정치 섬기는 정치 더 큰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명분이 서고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우리정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다, 정치가 정당민주화 해야 된다. 이 정당민주화 없이는 잘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표자 7. 최종숙: “한국 민주주의 진단 - 정치적 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전문성”

네, 처음에 소개받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최종숙입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을 기다리셨죠(웃음). 저만 끝나면 이제 끝입니다, 저는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좋은 말씀, ‘기본’ 이해에 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기본’을 얘기하고 싶고요. 기본 가운데 하나로서, 미래의 리더십 요소로서 정치, 정치적 훈련, 정치적 경험이라고 하는 기본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제한 글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막연한 리더십보다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자질로서 대표적으로 ‘행정능력’이 주로 꼽힙니다. 그 외에 ‘소통’, ‘신뢰’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갈등의 해결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선거를 통해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선출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질로서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치권 외부로부터 바람이 불고, ‘누구누구 현상’,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에서 아무리 누가 대세니 해봐야 외부에서 바람 한번 불면 판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로만 잡더라도 정몽준 현상이 있었고요, 고건 현상, 문국현 현상, 2012년에는 문재인 현상, 안철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기문 현상’, ‘반기문 대망론’이라고 불리는 반기문 현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입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최악의 UN사무총장’, ‘투명인간 리더십’, ‘기름 바른 뱀장어’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나쁜 이야기들도 많고, 또 소위 ‘운빨’로 사무총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능력있는 베테랑 관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은 정치경험이 없는 관료라는 겁니다. 물론 관료 경험이 추후에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명직 관료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요, 그것을 따르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러나 정치 는 전혀 다른 관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일이고요. 정당의 룰, 선거의 룰도 알아야 합니다. 현실정치의 룰에만 밝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도 보일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정치권 외부의 바람, 또한 누구누구 현상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이제 비리투성이이고, 구태적이다 보니까 차라리 정치를 한 적이 없는 외부인들이 되는 게 낫 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저는 기성 정치권이 싫어서 외부인한테 의존하는 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 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이 정치불신을 별로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성 정 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른바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수혈'된 새로운 피들이 사실 다 기성 정치인이 되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불신은 높습 니다. 또한 정치가 외부인들에 계속 의존을 하자니, 정치권 내부에서의 전문성,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로부터 유능 한 전문 정치인, 전문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 기반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 정치가 정당정치라면 아까 정당정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가 필수불가결이라고 한다면, 정당정치 논리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선거, 선거라는 것도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에서 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인 정치인이 획득하기 어려운 스킬, 숙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획득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뭐 높은 지 지율을 순식간에 얻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에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신인정치인들은 계속 바람을 일으켰지만 실제 당선권에 간 적은 없 었는데요. 2012년에 그런 사례가 두 건 있었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건 모두가 사실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존경하는 분인데, 문재인 후보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잘 못(?)썼지만, 간략하게 여기에서 말씀 드리자면 2013년 말에 이제 대선평가를 곁들여서 자서전 을 펴냈습니다.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잘 적고 있고, 대선평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은 문재인 전 의원이, 사실 경험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신인이었는데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2011년 12월에 입당을 처음 했다고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선거 지원 유세 이런데 가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첫경험이었다 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선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 민주당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런 정당을 사실 정치신인으로서 장악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대선평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대선 때 함께 일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후일담을 많이 펴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안철수 진심캠프' 역시 정당의 조직운영의 문제라든지, 준비부족의 문제라든지 등을 많이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들 스스로가 '선거 초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뒀다방"이었다, 진심캠프를 "뒀다방"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책에서 '후일담'의 한 군데에서 본 얘기인데요. 진심캠프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가 만약에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의 선거운동은 민주당 인프라를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문재인 후보도 이제 나름 '친노집단' 우리가 대개 친노집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친노집단, 친노세력들이 있었지요. 당내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끝내 민주당이 혼란의 도가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초짜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진심캠프, 그리고 선거초짜였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무모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 안철수의 문제가 이 두 분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정치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높은 업적을 쌓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신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노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해서 경험도 쌓고 당대표도 하시면서 정당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치신인이 갑자기 부각해서 뭔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9단, 정치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냐, 사실 이렇게 물으면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기본', 기본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은 갖춰놓고 그 이후에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환경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그 속에서 정치전문가로 성장해서 대권후보로 나서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정치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주제2. 한국 민주주의 미래: 종합토론 녹취록

본 녹취록은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학술토론회를 현장 녹음하여 그 결과물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발언자의 동의와 허락없는 인용 및 전제를 금하며,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 및 수정을 절대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부 토론 주제 2. 한국 민주주의 미래: 종합토론 70분 (16:50~18:00)

☞ 이호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발표합니다. 아, 저는 지금 복지분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에 대해 물으신다면, 이대로만 간다면, 아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13년에 부산에서 마지막 아기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인구가 없어질 나라 1위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2040년, 2030년부터 2040년 정도에 32.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명 중에 한 네 분은 65세이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여섯 명이, 왜냐하면 19세 미만은 별로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진단하기에는, 지금부터 7, 8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해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빨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에서는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딱 정해서 하나의 기조 아래에서 정책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아이를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문화 가정입니다. 2.0의 인구 대체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2040년 정도되면 인구의 10%는, 다문화 가정 분들이 자라서 가지고 인구의 10%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들이 왜 애를 낳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출산율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해남이거든요. 2.0이 넘는 인구 대체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왜 그런지 봤더니, 돈을 막대하게 쏟아 붓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애를 낳으면 2백만원, 두 번째 애를 낳으면 3백만원, 셋째 1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난하니까 1천만원 받으려고 애를 낳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도시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2백만원 줄 테니까 애 낳을래? 하면 낳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하느냐면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복지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서도 애를 셋째를 낳으면 1천만원을 주었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했다가 인구가 안 늘어난다고 그쳤습니다. 2년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위원들이, 2년동안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구대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정책, 최소 30년, 40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 붓는 방법 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게 예산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네는 이제 홍보 위주로 가라,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금 '골든 타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복지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관후: 아,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조금 쉬어가는 느낌에서, 방금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크게 두 가지 제도가 바뀐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노인 임플란트 적용이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소위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맞춤형이란 얘기는 전업주부들한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70%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임플란트는 다섯 살이 늘어났고, 어린이집 보육은 30% 정도 깎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한테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중에 자기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영국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미덕 중의 하나가 현직 수상이 수상관저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게. 현직 수상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제도 시스템, '어린 애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난 주에 전국적으로 몰아 닥친 수족구(병)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고, 보통 제가 아는 동네의 사람들은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 제 또래들입니다. 이제 어린 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할 때도 네 살짜리를 데리고 다니고, 지금 어디 연구원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네 살짜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효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해남에서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돈을 주기도 하지만. 제 이종 형이 해남에서 지금 다문화 가정이고 셋째 애를 낳거든요. 가능한 이유가 또 하나 뭐냐 하면 돈을 주기도 하지만 '공동육아'가 가능한가? 해남에선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고,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더라도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도시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둘째, 셋째를 낳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고 복지시설도 지원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애를 돌보기 어려울 때, 누가 봐줘야 하지요, 누가 옆에서 애를 봐줘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재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그 '연대'도 말씀하시고 '공감'도 말씀하시고 정치지도자의 '덕목'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후반부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원래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좋은 대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공감능력, 연민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아는 것. 3,40대 젊은이들이 왜 애를 못 낳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알긴 알아요,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에 조사하고 다닌 경험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은 50대, 남성, 관료, 법조인, 경제인 딱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이 분야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예요. 관료로서, 법조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아마 자기 애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 대표성 문제가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직접 다 경험할 필요는 없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

자면 '공감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경험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야 공감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사적인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한 겁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공적인 문제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료란 단순히 행정집계만을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갈등, 가치의 충돌,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잘나가는 CEO, 잘 나가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보육정책에는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애 기저귀를 갈아줘야 보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대표성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여성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단계에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민주화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 김현진: 네, 저는 사실 국회에서 한 6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 자율권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에 대한 긴장과 갈등관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왜 그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특히 이 정치권에서는 이 어떤 인재,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충원 과정이 제일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그 판을 보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성공한 사람들 이외에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을 만한, 그런 구조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청년이든 정치권에서 공천을 받는 이들을 직접 보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활동을 했다고보다는 기존의 제도권에 기생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향식 공천제도가 과연 해답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앞세워가지고 사실 공천과정에서도 왜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치적인 토론과정 속에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의 틀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만이 진정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을 평가할 때, 시민사회나 시민단체가 하는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를 계량화 해가지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안이라는 게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고, 새로 제정해서 내는 법률안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정해서는 내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내놓은 법률안이 청구입법 형태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내는 법률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 숫자, 단어 몇 개 바꾸고 해서 내는 법안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 사회적인 파장이 크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방식은 어느 국회의원이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느냐, 이걸 가지고 일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평가를 하니까 다들 외부에서 보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면서 본인은 이런 법안을 냈다

고 자랑스럽게 언론에 내고 홈페이지나 이런데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보다 정상화된 방식으로 뭔가 감시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양적 활동보다는, 질적인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박창식: 네. 지금 청중석에서 몇 분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운동'의 최병현 선생님이 민주주의의 대안과 관련해서 '지속적 발전의 토대로서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이 지금 있겠습니까'라는, 장기적으로 20년 뒤, 30년 뒤의 민주주의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이시고요. '일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와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라는 현상을 볼 때 한국민주주의에 희망은 있을지, 더 나빠질지?' 이런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한 분 '통준사'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윤영전 선생님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긴,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다들 노래하지만, 과연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한가지, '통일의 걸림돌인 '한미공조'는 파기할 수 있을까요?'라는 것과, 세 번째로 '적어도 2017년에 통일 전망이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이신데요. 현재, 화두를 문제제기를 해주시는 걸로 반영을 해 놓고, 시간상 다음 토론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또, 김재철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 김재철: 저는 아까 권력거리랑 리더십을 연관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권력거리랑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서 뽑는 정치인들의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권수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20대 국회 자체가 젠더 정치랑 청년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실종된 게 다문화도 실종이 되었습니다. 19대 때는 다문화 분야 한 분 계셨다고 알고 있지만 이제 다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실종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정보'와 '공정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에서도 의석 수 자체가 많이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적인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많이 미화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출신 변호사 누구누구, '고졸신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친 서민적인 발언을 했지만, 막상 그 사람들 뚜껑을 열어보면 석사졸업,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이고, 변호사도 나름 괜찮게 하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을 많이 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국민들이 뽑고 싶은 친 서민적인 분들을 못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 아까 제가 말했던 슈퍼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좀 관계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오랫동안 배우고, 학습을 통해서 대권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최종숙 박사님)이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청년들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부터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커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전문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 뭐 이런 걸 떠나서 특히 비서진들도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국회에서 잠시 인턴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거기도 엄청난 계급사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와 달리 민주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신 계급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급적인 측면과 아까 말씀 드렸던 권력의 간격, 그걸 다 없애려고 하면 객관적인 정보와 공정성을 통해서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청중 1 (남성학생-소속 및 성명불상): 지속적으로, 미래의 민주주의 대안으로, 대표의 좋은 자질·자격, 슈퍼리더, 특권의 최소화를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지속가능한지,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슈퍼리더 말씀은, 좋은 자질과 자격을 갖춘 대표가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 선거 때마다 그 슈퍼리더가 당선되어야만 그 '착한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가 아니라, 결국 '1인'의 가치관, 도덕관에 따라서 사회 민주적 가치관까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질문과 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일'과 '한국민주주의의 신장' 사이의 개연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말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민주주의가인지도 회의가 듭니다. 사실 이를테면 '경쟁'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보편적 일반사람들은 경쟁을 '긍정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경쟁은 자율적이고 보편적이다' 즉, 모두가 보편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상속 등을 포함한 계층의 단층적인 상황, 생산의 복제(?)이고 경쟁에 대한 이런 상스러운 생각들은 편협한 결과, 즉 일부의 계급과 계층만이 독식하고 있는 편협한 결과,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마치 자유롭고 보편적인 듯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30년 민주주의를 되돌이켜 보면은 실제로 '모듈'이라는 장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듈'이라는 정책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논의들은 한국민주주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의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마치 여름에 더운데, '그럼, 안 더우면 되잖아!'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식: 네, 지금 오후 6시가 마치는 시간인데, 지금 주최측에서 10분을 더 주시겠다고 해서 6시 10분까지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좋은 문제제기이고요, 이제 마침 김재철 선생님의 슈퍼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만, 사실은 슈퍼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이 셀프 리더가 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20년 뒤, 30년 뒤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좋은 리더십이 형성되려면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또 재생산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뭐 어디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럼 이제 한번 뭐 보너스(정치적 리더) 비슷한 거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대표가 되기도 하는, 전혀 뭐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기저귀를 갈아보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리더십이 정상화, 재생산되는 과정이 아예 없다시피 한 사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20년뒤, 30년 뒤에도 저는 슈퍼리더십은 우리사회에서 전혀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은 현재의 문제가 중요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청중 학생 분의) 말씀도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안 하신 건 아니고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다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있다 좀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리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 임미리: 까먹을까 봐 빨리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청석의 국민운동 최선생님의 질문하고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자 분께서 '지금 '자기분야'에 대해서 2, 30년 뒤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나아지냐?"라고 하면 그거는 목소리를 독점했던 집단, 대표적으로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아질 것이고 이유는 지식인들이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운동을 비롯해서 사회 전 분야가 지식인, 또는 그 전체(?)를 이분법적 전선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전선 안에서 서로 강론 하면서 목소리를 독점해 왔던 집단들이 있고, 권력다툼에서 대표적으로 지식인들이 그 목소리를 냈었죠.

그런데, '지식의 독점현상'이 지금 IT의 발전 등등으로 해서 지식의 독점이 사라지게 되면서 각 부문들이 이미 현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장 선거 때만 되면, 이쪽으로 모이시라, 저쪽으로 모이시라 해서 권력과 권력자와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체를 이끌어 왔다면, 거기에 대한 반란이 지난번 선거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전선의 해체는 바로 독점했던, 하나로 독점했던 전선의 양쪽 진영에서 목소리를 독점했던 집단들이 해체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 목소리가, 그 독점한 목소리가 해체됨과 동시에 부문별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후에 지식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후에는 과거처럼 "이쪽으로 모이라, 하나의 깃발아래로 모여라, 이번에는 무슨 깃발이 옳다, 한국사회는 어떠한 깃발이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면, 앞으로는 부문별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고스란히 사회에 드러낼 수 있도록 지식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은 맨날, 그렇게 (그런 일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지식인은 진정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른 생활은 하나도 못하고 글하고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다른 부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참여하는 것 외에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저라면, 제 경우라면 아마 두 가

지 방향에서 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무직자 내지는 비정규직 연구자로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흡연자인데 작년에 담배세 올릴 때, 담뭇값 올릴 때 가당치도 않은 '생명과 건강'의 이름으로 '서민증세'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담뭇값 인상을 저지함과 동시에 서민증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일동 박수)

이게 바로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부문별 목소리'가 대의자들에게 좀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직접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직접민주주의도 향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년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년이 단지 힘을 가진 세대일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좀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 청년에서 노년세대와 경쟁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경쟁 이후에 또 하나, 그럼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든 사람이 사회의 권력을 좀더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청년은 늘 '미래세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 가지는 그런 집단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은 경쟁하고 다른 의미의 '투쟁', 그러니까 싸워서 바꿔 가시라, 그리고 본인들이 노년세대까지를 포함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싸워서 바꿔 가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라. 네.

☞ 최종숙: 네, 저는 최종숙입니다. 저는 지금 임미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한가지만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임미리 선생님이 지금 지식인, 반지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식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역할을 못 해왔고 그리고 언론을 독점해 왔다고 인정을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힘을 독점, 뭐죠, 그렇게 힘을, 자신을 끌어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국민에 대한, 특히 미래세대, 20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통일 관련해서, 모춘흥 선생님이신가요? 통일시대를 짚어질 청년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20대들과 통일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통일시대를 짚어질 청년세대라는 것에 너무 동감을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 20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20대들과 얘기를 해보면 다들 '반통일'적인 생각과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북한은 김정은 체제인데 김정은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같은 또래이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고 예전에 천안함 사태 당시 군대에 있었다든지 이런 20대 후반의 남성청년들의 경우에는 대화가 거의 진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이라고 할까요? 슈퍼리더가 나타나서, 팔로워들이 셀프리더가 되고, 슈퍼리더로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미래세대가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민중봉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중봉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읽기는 했는데 저는 그것이 합당한지,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한 민중봉기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베' 마저도 사실 봉기를 얘기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봉기에 대해서, 예전에 그 (신은미씨 콘서트) '테러'와 같은 것도 일으켰고, 일베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봉기도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봉기이어야 하는가. 어떤 '플랜'과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봉기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격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봉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유경남 선생님이 쓴 발제문을 보면 '과거'의 6월항쟁을 겪은 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어떤 운동의 전수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 87년 6월 항쟁 세대는 386세대거든요. 그 때 봉기의 절정에 있었던 세대인데 다 '꼰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세대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치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386세대들이. 저는 적대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386세대하고 치인 세대인데 적대적으로 볼 생각은 없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요직은 거의 386이, 정치도 그렇고,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90년 세대도 거의 막차를 타는 세대라고 해서 지금 2, 30대하고는 또 적대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기의 주역이 20대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20대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도 '꼰대'가 되는 지 모르겠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이죠. 파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봉기 같은, 어떤 정치적인 집합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데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과학기술들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기, 뭐 스마트폰이나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고, 그들의 성향 자체가,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X세대라고 하는 세대 이후에 개인주의가 일상화되면서 지금은 거의 극단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세대들이 정말 '혁명'이나 '봉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집합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 '봉기'라고 하는 건 정말 예전 방식인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다른 형태의 '방식',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경남: 네, 저는 역사학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선 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술대회에 오게 되면서 봤던 것 중의 하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한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개인의 권력을 양도해서, 효율성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로,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를 '뉘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향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안에선 항상 희망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선의적인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회

가 이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던 계기로서 이제 '봉기', 그건 '사건적인 봉기'이긴 하지만, 봉기적인 어떤 '실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실천이란 것은 어 지금까지 뭐 논의되었던 의회적이거나, 제도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개인에서부터 출발하는 직접적인 실천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세대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이유가 근래의 한 10년의 현재의 세대들은 촛불(시위)도 했구요. 세월호 상황에서 '자기의견'들을 표출하는 행동들을 계속 해 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과정들을 보면, 이.. '봉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의 시작점은 '자기이해'와 '현실인식'입니다. 현실적인, 정확한 현실적인 인식, 그리고 '자기인식'. 어, 흙수저라는 용어가 있다면 '자신이 왜 흙수저 인지', '흙수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젠더'가 문제라면, 젠더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되구요. 그러한 대안으로서는 한가지가 저는, 어 선생님은, 계급애기, 김재철 선생님은 '신계급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새로운 공동체' 모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이나 지역에서 실천되는 '조합'이나 '학습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 그 학습을 통해서, 시민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시작되는 직접민주주의가 다시 '봉기'라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 내지는 '계기'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1부에서 나왔던 세월호 얘기가 나왔는데요. 세월호는 현재로서 국민다수가 (현상황에) 불만족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죠. 5.18의 사례를 들자면, 5.18이란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제대로 정립되는 데는 청문회가 8년 걸렸고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로잡힌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정치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거기를 저항했을 때, 정치적 복권의 사례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월호가 어떻게 될지 논의되고 있는 진 모르겠지만 향후적으로 우리사회, 한국사회의 경험들을, 그것들을 바꿔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관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경험적인 측면, 많은 것들을, 잘 된 것도 경험해야 되고요, 박근혜도 경험해 봐야 우리가 그 다음(청중 웃음),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책 속에서만 박정희를 배웠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잖아요. 어,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모색'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세대' 논의를 문의하셨는데 한국사의 어떤 왕조적 변화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예컨대, 조선왕조의 오백 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자의 난'? 이 정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초기단계에서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하고요. 어.. 이관후 선생님께서 이제 '공감'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좀더 덧붙이자면, 어.. 한국사회는 그 관료제적인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적인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직적으로 상승하려는 '공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게 일종의 선전장치가 될 수도 있

고 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데요. 공동체 논의가 계속된다면 '수평적인 공감', 이 수평적인 '공감'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해 내고, 그 대표자들이 정말 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의 답은 없겠죠. 그게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실천되어야 되고,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도 이제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한국사강의를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현재의 20년, 30년 이후라면, 일정 정도의 사람들의 자연적인, 사회적인 일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때의 위치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저 역시 그 때가 되면 장년층이 되겠지만, 그 때의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20대가 2, 30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논의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론적이긴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 박창식: 네. 어, 정리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석에서 아까 영남대학교 학생인 우승연씨가 '통일'에 관해 건의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긴 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상 이해를 해주시고, 토론자 중에서 한 분 정도 더 하고, 정리하는 순서로 갈까 하는데요. (웃음). 박현우씨? 네, 그럼 1분씩만 (발언을) 아주 짧게 해주십시오. 네 박현우 선생님부터 1분씩, 마이크를 쪽 넘겨주세요, 자동으로.

☞ 박현우: 통일은 언제 되느냐? 막혀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려있었기 때문에 언제 올 지 모를, 막연한 예감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16년을 거꾸로 못박으셨습니다. 현실성 되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올해에 못하면,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내려 주신 건데요. 이젠 우리가 그, 미완의 광복을, '통일'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대표자들이 생각을 해보고 정치권에서 이때까지 통일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통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꾸로 소망을 해보는 엇갈린(?) 발언을 해 가지고 웹(?)..

그 다음 아까 그 한미일 공조 파기와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사드' 문제가, 그 중국 측에서 과연 우리 편이니? 미국 편이니? 라고 테스트를 해 본 거였고요. 우리는 거기에 회색조로 대답을 했었을 뿐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미일 그 전략에 의해서 중국이 포위당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에 기대고 있고,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에 기대고 있고. 또 무수단 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이라는 위기가 또 놓여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뭐 한미동맹, 혹은 뭐 한중관계, 대북관계, 뭐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외교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갖고, 이를, 용기 있는 선택법, 미움 받을 용기를 대처할 수 있을 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저희 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뭐 자동으로 될 거 같고. 오히려 통일의 기회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

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과 '경험', '통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경험이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 통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이 민주화의 꽃을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번영의 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고, 그를 위해 '대화와 설득', '추진력', '용기', '강철체력'을 가진 새로운 '통일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원: 어,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앞서 지적을 해서, 그게 가장 급선무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전공분야는 일단 행정분야가 가장 이슈적인 게 이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해서, 정치인 혼자서 관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나 제도같이 최소한 2, 30년 그러한 것들을 포용할 통로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리라는, 되리라고, 다만 인프라가 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적지 않은 측면에서 의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데는 반세기 이상 걸리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자살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 11년정도 연속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오늘 발제인가 글을 했어도(?) 사실 행복보고서를 이제 보시면, 실제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이 궁극적인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의 그, 행복지수가 157개국 중에서 58위이고요. 전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불행하더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제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됐는데. 어,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저는 요새 뭐 조세개혁제도를 통해서 건자, 뭐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 것,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그 유경남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더라고요. 조합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잘 실현되어 있는 덴마크의 특징은 중산층이 굉장히 두텁고, 사회보장제도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해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현대 에너지는 소통과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재철: 어떤 대체적(?)인 말만 하니까, 아까 질문 들어온 것들 있는데, 답을 해 드릴 건데. 슈퍼리더십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든 사회체제가 흔들린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육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고등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 국영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거기에 1등부

터 끝등까지 서열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자량을 삼는다거나, 자기가 위로 어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국영수, 사회과학을 못 하게 돼버리면 박탈이 되는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는데, 만약에 교육과정, 교육을 개선을 해 가지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그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슈퍼리더십이나 사회적 리더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광송연: 아,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발언하는데, 자꾸 압박을(웃음) 주셔가지고 1분 내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저, 3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우선은 선생님,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2부의 주제로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 ‘2, 30년 후에 한 국민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한국정치를 전공을 했고요. 제 전공분야 내에서, 그러니까 그거, 그 주제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민주주의이냐?’라는 부분이 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제가 발표할 때는 ‘뤼시 마이어’를 예로 들었었는데, 또 그러니까 민주주의 논의에서 대부분 많이 인용하는 학자 중의 하나가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대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뭐 49 대 51, 이 뭐 이렇게 이 갈등이라든지 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허나 한국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균열’, 기존의 이제 그, 어떤 사회든지 사회라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균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갈등’으로 보고, 분열초상으로 보고, 그것 자체가 저는 이게 ‘반대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생성하는 하나의 그 주요한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의 ‘균열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 기존의 그러면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대한(?),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균열’, 중요한 사회균열이 무엇이냐?

아까 그 최종숙 선생님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최종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대표성의 위기, 정당의 위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의 비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우리 정치를,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균열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지역주의’인데 ‘과연 지역주의가 사회균열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이제 2, 30년 후에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측할 수 있는 사회균열, 이 사회균열을 그 이제 제대로 정치균열로 반영을 해야 할 건데요. 어, 여러 선생님들 말씀 속에서 나왔지만 먼저 아까 그 ‘인구감소’ 그 얘기하시면서 이호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 이호빈 선생님의 발표를 참조를 하자면은 다문화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인구가.. 그러니까 반면에, 기존에, 그 이제 그.. 이런 표현을 해서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주변’을 위해서 순수한 한국인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균열, 새로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회균열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준비’, 이

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그 계속 대상(?)되었던 문제였던 중요한 부분,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빈곤'문제, '계층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균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소득'이나, 뭐 '보편적 복지'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2, 30년 후에 한국정치가 어떻게 될 것냐?'라는 부분은 이 2가지, 미래에, 단기간에, 곧바로 해결해야 될 걸로, 아니면 현재부터 미리 준비해야 될 걸로 예측되는 이 사회균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유경남 선생님의 그 논의를 참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 기존의 뭐 '녹색당'이라든지 물론 의회진출에는 그 실패는 했지만 노동당이라든지 새로운 그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균열을 반영하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들도 있고, 또 생협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요즘엔 '택시조합'도 생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그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도전 내지는 '전복'까지도 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이 확산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예측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는 이제 그 리더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일종의 가치지향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말과 리더십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 없는 사회'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리더 없는 그 세대, 그리고 이 대통령이나 뭐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시민의 의무를 그 다하기 위한 것이고, 봉사하는 동지라는 이런 관념들이 유포될 수 있을 때, 장기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창식: 네. 감사합니다. 뭐, 거의 이제 정리성 발언까지 하셔서(웃음). 정리해서 말씀해서. 아, 주최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뒤에, 남은 말씀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또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자료집에 반영하고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집으로) 뵙겠구요. 현재, 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기자는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1부에서 손혁재 교수님께서 좋은 의제를 다 꺼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주위담기만 하는 식으로 된 것 같고.

사실은 학술토론회의 결론이라는 것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의점을 찾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느냐는 것이거든요. (토론회의) 흐름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이런 건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또 손혁재 교수님 진행을 통해서 얻었던 아이디어랄까 한다면, 뭐 저는 이제 그 2, 30년 뒤 한국사회는 거의 망할 거라고 봅니다. 탈출할 줄 안다면 빨리 탈출해라 뭐 이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망한다. 탈출해야 하고 봉기해야 하는데, 두 개는 못하고 탈출하거나 봉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반드시 망한다고 보고.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온 성장의 동력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렇게 본다면 극단적인 어떤 개인중심, 뭐 성공주의, 출세지상주의 등등 해가지고 비단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이죠. 이 극단적인 개인중심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자기의 각자 도생주의, 이게 전부이다 보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가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식의 이제 '다음세대의 리더십'이라는 게 극단적인 개인중심주의가 아니라 전부까지 함께 가는 더불어, 공감, 연대, 소통, 체험, 아기 기저귀 갈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여러 경로로 가는, 그러나, 한 사람의 뭐 그 능력이나 성격만으로 될 일은 아니겠지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20대가 가장 통일경제론이 환상이다라고, 이런 게 상대방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일방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불어 생각하지 않고. 그게 뭐 북한사회도 그렇고 우리사회 내부도 똑같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남북관계는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망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 현장 청중 질의서 및 의견서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년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질의서

2016. 06. 29. (수) 14:00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질문은 = 질문은 항쟁 30년만에 어떻게 기억되나에
* 서면질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사회자가 대신해서 토론자들에게 질의해드립니다.

소속 : 한국자유총연맹의 회관(회장) 성명 : 윤 영 진

남자는 198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관 - 정국에서
전두환 나.13 전두환, 5.18 광주항쟁을 전부 폭로한 박정희
5.25 개헌이후 정국, 정국 이관기, 보좌. (박기룡과 함께)
「보좌관의 역할」으로 계엄령 해제, 6.29 선언을
행. 개국 자유총연맹 (15년만에 비준으로 대통령
* 2년 남짓 태생은 양강의 두터운 밑거름이 있었음)
최연수씨와 고남환, CP 박정호, 정승환, 사단. 있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16년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질의서

2016. 06. 29. (수) 14:00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 서면질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사회자가 대신해서 토론자들에게 질의해드립니다.

소속 : 민주주의 국민운동 성명 : 최병현

①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상의 개념으로서 한국 사회 911의 양극화 시대와 함께 정권이
세계적으로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각종 불평등, 차별, 연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력 필요.

특히 이 관행, 역사에 이 관행에서 공인도 부족.

(전반, 전망 어느 화두에서건 상관없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16년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의견서

<사회적 다양함에 반응하는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소속: 건국대학교

성명: 김창욱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의 특성을 갖는 제도들을 택하며 현재까지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갖춰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광송연의 연구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중에서 자유화 지수와 평등화 지수를 인용하여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선거에 있어서의 국가 기구의 개입 논란, 정당 내부에서의 퇴행적인 공천 파동, 국가 권력의 개인의 권리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다른 한 축인 실질적 민주주의 또한 뒷받침하지 못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화가 아직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지원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 담론이 시대정신과 국가과제로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측면으로,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안한 삶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기의 반복과 지속 속에서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왔을 것이다.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혐오정서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범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가 일어났다. 혐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의 사건의 피의자는 관련 유무를 떠나,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사회 내부에서 기회구조가 약해지면,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분노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모춘홍은 분노가 내재화된 한국사회의 모습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분노는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분노의 잘못된 표출은 강자와 약자를 끊임없이 가르고 공격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혐오 현상과 그로 인한 범죄는 한국사회가 심각한 갈등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여성에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를 보호할 장치가 매우 부족한 데다, 일부 극단적인 남성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성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권수현은 이런 여성 차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질이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방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재철은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노하는 국민들은 많지만 또한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국민들의 삶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비하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2012년 대선을 제외하면, 최근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58%의 투표율이 나왔고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도가 민의를 얼마나 잘 대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여러 곳에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갈등을 잘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에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진단한 일군의 토론자들의 공통된 인식 속에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점을 토대로 토론자들은 민주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를 어떻게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이관후의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다른 유형들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사회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제도의 수입과 이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가 효능감을 주지 못할지라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혐오를 유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냉소주의는 제도적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배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관후는 이에 대해 시민도 정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임미리는 다양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갈등을 적대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격차'의 해소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자의 제도권 정치의 진입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제도적 대안으로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제의 확대다. 현행 제도인 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 의회 내 다수를 쉽게 만들고 1지역에서 1대표를 낸다는 점에서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표를 제외한 모든 표는 '사표'가 되고 거대 정당의 후보자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소수 정당이 원외에만 머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 정당이 대변하고 조직한 정치사회적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막히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배제된 목소리를 정치체계 밖에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체계로부터 소외된 목소리와 제도정치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권수현)

또한 제도가 아닌 차원에 있어서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수현은 정당 밖에 있는 행위자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결(networking) 작업을 통해 유권자 혹은 시민들은 제도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도권 정치는 사회적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에 반영되지 못한 사회균열을 연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본 의견서는 토론회 당일 현장에 참석하신 김창욱님께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ikd0610)를 통해 2016년 7월 19일에 제출하신 의견서(감상평)임을 밝힙니다.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자료집

발행일: 2016년 7월 29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